
2026년 인천을 바꾸는 시민환경정책 공모
인천환경정책ON 정책제안서

인천환경정책ON 추진위원회

인천환경정책ON 제안서 발간에 부처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는 인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자원순환의 전환, 바다와 갯벌의 보전은 더 이상 일부 전문가나 행정의 과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삶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 의제이며, 이제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분명한 방향과 실행 계획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인천환경정책ON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시민이 직접 인천에 필요한 환경정책을 제안하고, 그 제안이 공론의 장을 거쳐 실제 공공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총 39건의 정책이 모였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18건의 후보 정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시민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가리고, 정책공유회와 지방선거 대응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하는 흐름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했던 것은 단지 정책 몇 가지를 고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민이 도시의 환경문제를 자기 삶의 문제로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 방향을 제안하며, 그 결과를 다시 정치와 행정의 언어로 연결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인천환경정책ON은 단순한 아이디어 공모가 아니라, 시민의 제안을 공론화하고 공약화하며 이후 이행까지 점검하는 시민 주도 거버넌스의 실험입니다.

이번 제안서는 그 실험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우리는 인천의 바다와 갯벌, 도시의 생물다양성과 녹지, 자원순환과 녹색소비, 기후에너지 전환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직접 선택한 정책들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각 정책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인천에서 실제로 추진 가능한 과제이자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검토하고 실행해야 할 정책 제안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시민이 제안하고 선택한 이 정책들에 응답해야 합니다. 무엇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 이행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인천환경정책ON은 이번 제안서가 지방선거 시기의 일회성 문서를 넘어, 시민과 함께 인천의 환경정책을 바꾸고 그 약속의 이행을 끝까지 점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천환경정책ON 추진위원회

정책 제안자

@hjkim_100 5.3합창단 5강4 6시내송도 강가딘 강경하 강기혁 강길권 강동현 강또 강명자 강미조 강선주 강신천 강연희 강주호 강차병 강호정 개구리 겨울눈 고경구 고길해 고대성 고덕규 고마리 고연실 고태서 고훈 곽경희 곽대근 곽덕민 곽정우 구영호 국화 권길재 권도근 권용현 권진원 권창식 권해형 기용득 기태균 길미정 김가현 김경화 김광열 김권혁 김규민 김근건 김기형 김기훈 김길규 김개순 김나연 김나현 김다현 김대영 김도지 김동현 김말숙 김미람 김미영 김미화 김민기 김민선 김민아 김민영 김민희 김박사님 김보경 김복순 김상섭 김석대 김선미 김선영 김성관 김성규 김성만 김성은 김성태 김소연 김소향 김송미 김수연 김수연 김수정 김순래 김순옥단비 김승면 김애자 김언수 김연우 김영구 김영미 김용래 김용숙 김유경 김유진 김유진 김은비 김은진 김자경 김재구 김재실 김재훈 김정국 김정순 김정순 김제용 김종미 김주봉 김주성 김지미 김지숙 김지연 김지영 김지현 김진경 김진서 김진옥 김진현 김창길 김창수 김창호 김하나 김한비 김한샘 김한준 김현석 김현수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현진 김혜련 김혜림 김효연 김희도 김희수 콩쓰 꽃bee 꼬꼬리 꾸루꾸루밥 꿀벌 꿈쟁이 나다움 나름나름 나명원 나비 나연 남궁은경 남성 노랑 꽃마리 녹색하마 다햇님 달개비 도감뿌리농원 도토리 동글이1970 동글이맘 동백 두부콩 돌리 들꽃 들풀 디와이 푼푼이 레드선 랫츠탈렉 로이맘 로키 루가 류경창 류수진 림 마경은 마녀엄마 막차 만수동 맥킨리 머금돌 문미정 문성태 문신호 문유진 문준호 문지혜 문형윤 물푸레나무 미코레오 민경모 민경서 민경순 민경옥 민병희 민셋별 바닐라라떼 바다사이다 바람돌이 박강복 박고은 박권규 박영쿨 박동원 박미정 박선하 박성자 박성현 박소영 박수진 박수현 박순애 박승용 박양원 박영대 박영란 박예은 박옥희 박유림 박유화 박은경 박은신 박정민 박제환 박종구 박주희 박준덕 박해진 박현준 박현정 배운범 백마장정씨 백승엽 변성준 별 보나 보름달 보리 봉봉이 분이 비사투파 비양도 빅토르양(은혁) 빈마마 짹짹 짹짹이 빨강머리앤 사그리 산들바다 살구 살구파파 살아있는물터로 상큼둥 샤프란 산티 서경혜 서로 서유정 서종수 서희원 석정엽 설미소 설정훈 성현진 성혜윤 소나무 소장 솔나리 송다래 송도발전 송도송도동 송지혜 송혁임 송형선 송훈연 수덕 수선화 순발이 시아이빙 신광섭 신명숙 신봉훈 신선희 신승현 신승환 신애성 신영진 신정은 심형진 아이미 아이스크림 안경준 안귀옥 안동하 안미숙 안시준 안준영 안준석 알럽인천 알베르토 양소희 양승립 양윤정 양택능 양희현 어진성 여랑 연희맘 오경은 오명희 오봉근 오세의 오연환 오은경 오정석 오태훈 오현석 오현숙 옥이왕 왕빛나 왕철현 외계인 움츨츨 우나영 우영재 원미정 위성우 유가영 유기선 유련 유새늘 유신영 유은석 유현 유희성 윤가형 윤동구 윤보라 윤슬 윤이 윤준호 은하수 이경미 이경선 이경하 이광민 이금자 이나라 이누리 이다혜 이랑 이명자 이명진 이미경 이미영 이미화 이민기 이민영 이민호 이병욱 이보람 이상영 이서현 이선민 이선혜 이선호 이성일 이소연 이소영07 이수빈 이수연 이수영 이아영 이애란 이애희 이연희 이영미 이영자 이영자 이영현 이예슬 이예은 이예진 이유희 이윤호 이은규 이은영 이은재 이은주(올리브) 이재원 이정남 이정석 이주은 이준범 이준식 이준호 이지아 이지우 이진 이창숙 이초랑 이태경 이태준 이하니 이하이 이현빈 이현숙 이현욱 이해란 이희정 이희환 인수범 인천토박이 일돌 임병구 임세정 임영준 임하늘 임혜린 작은행복 장강중 장기성 장보고 장시정 장연구 장진우 장학영 자니오션 전경아 전란형 전영란 전인희 전호영 전희진 정건준 정구갑 정나찬 정무선 정미경 정미란 정미영 정민철 정보영 정아현 정연유 정우준 정은교 정의순 정인진 정종실 정지숙 정진선 정진숙 정진욱 정진화 정하린 정현숙 정혜주 정홍석 정희연 조래정 조명철 조상원 조선희 조성운 조성진 조아 조영보 조운정 조윤희 조이 조진영 조하나 조혜영 조휘산 주미선 주선숙 지나0 지서아 진재근 째이랄라 차정은 채봉희 책구리 천창민 초록 초원이야기 최 최보라 최보라 최선영 최성엽 최성용 최송화 최애란 최영미 최영순 최영애 최영자 최용훈 최원희 최위환 최이중 최인식 최장이 최정희 최정희 최준 최진형 최진희 최혜랑 최혜진 카롤린 크린 키다리아저씨 토트넘 툴립 파랑새 팡이 펭귄 하미란 하민 하얀코끼리 하은영 하지윤 한도리 한상훈 한석현 한세현 한아름 한은영 한재호 함형복 허윤진 허은 허진 협협해 현지환 형아 형지혜 호랭이 호이호이 흥단 흥당무 흥미화 흥영복 흥이아빠 흥정재 흥훈 황수현 황지혜 황현주 황혜진 후추 희아 히메나 CSK tomodazi10 외 무명의 인천시민 108명 포함 총 인천시민 656명

가톨릭환경연대 글로벌에코투어연구소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모두의거버넌스협동조합 인천갯벌세계유산추진시민협력단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 인천YWCA 저어새NGO네트워크 지구환경교육센터 환경브릿지연구소 등 15개 기관·단체

목 차

| | |
|---|-----|
| I. 개요 | 7p |
| 1. 배경 및 경과보고 | 9p |
| 2. 정책 제안 | 12p |
| 3. 맺음말 | 23p |
| II. 세부 정책 | 25p |
| 1. 도심 방음벽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축 | 27p |
| 2. 우리마을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지원 | 29p |
| 3. 산업단지 태양광 의무화 및 지원 | 30p |
| 4. 인천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운영 | 31p |
| 5. 구도심 주민참여형 포켓파크 100개 조성 | 32p |
| 6. 대체서식지 실효성 확보 및 책임 관리제 | 34p |
| 7. 인천광역시 생물다양성센터 설립 및 운영 | 36p |
| 8. 인천형 가로수 보호 조례 및 생태적 관리 | 38p |
| 9. 영종갯벌 및 준설토 투기장 습지보호구역지정 | 40p |
| 10. 인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 41p |
| 11. 어업인 참여형 인천 해양쓰레기 수거 보상제 | 42p |
| 12. 인천 섬 생태관광 및 '에코 도슨트' 마을 기업 육성 | 44p |
| 13. 인천 연안 시민에게 돌려주기 | 45p |
| 14. 서해 5도 해양보호구역 및 '남북 그린데탕트' | 46p |
| 15. 인천 초록가게 네트워크 및 리필스테이션 확대 | 47p |
| 16. 노프라오션 프로젝트(NO Plastic Ocean) | 48p |
| 17. 군·구별 종량제 전처리(MBT) 시스템 도입 | 50p |
| 18. 이음포인트 기반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정책 | 51p |

I. 개요

1. 배경 및 경과보고
2. 정책 제언
3. 맺음말

1. 배경 및 경과보고

1) 추진 배경

인천환경정책ON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이 직접 인천의 환경정책을 제안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안하기 위해 기획된 시민참여형 정책 캠페인이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훼손, 갯벌과 해양 생태계 위협, 자원순환 전환과 같은 환경문제는 인천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선거 과정에서는 주변 의제로 밀리거나 일부 전문가와 행정의 과제로만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인천환경정책ON은 시민의 문제의식과 생활 속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환경 현안을 해결할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공론화해 실제 지방정부 정책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단순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발전하고, 시민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확인한 뒤, 정당과 후보자에게 공식 제안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

또한 이 사업은 환경정책을 어렵고 추상적인 의제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의 공적 과제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선택한 정책을 바탕으로 지방선거의 환경 의제를 확장하고, 선거 이후에도 정책 반영과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인천환경정책ON의 핵심 취지이다.

2) 추진경과

① 주요 추진일정

| 일정 | 내용 |
|-----------------|-----------------------------|
| 2025년 9월 ~ 10월 | 인천환경정책ON 추진위원회 구성 |
| 2025년 11월 ~ 12월 | 온라인 정책공모 : 39건 참여 |
| 2026년 1월 | 정책심사 : 18건 선정 |
| 2026년 2월 | 온라인 시민투표 : 665명 참여, 우선순위 선정 |
| 2026년 3월 | 2026 인천환경정책ON 시민정책 공유회 |

② 인천환경정책ON 추진위원회 구성

- 기관·단체 : 15개 단체
가톨릭환경연대, 글로벌에코투어연구소,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모두의거버넌스협동조합, 인천갯벌세계유산추진시민협력단 인천갯벌2026,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 인천YWCA, 저어새NGO네트워크, 지구환경교육센터, 환경브릿지연구소
- 개인 : 3인 (문지혜, 송형선, 최정희)
- 기획단장 : 지영일 모두의거버넌스협동조합 이사장

③ 온라인 정책 공모 : 39건 정책 참여

- 공모 내용
참가자 정보, 정책 개요, 제안 배경 및 문제점, 정책 내용, 정책 실행수단,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정책 지속가능성, 기타 참고자료와 근거
- 총 39건 참여

| 분야 | 참여건수 |
|-------------|------|
| 기후 · 에너지 | 8건 |
| 녹색소비 · 자원순환 | 9건 |
| 물 · 하천 | 2건 |
| 생물다양성 · 녹지 | 8건 |
| 섬 · 바다 · 갯벌 | 8건 |
| 환경 전반 | 3건 |

④ 정책심사 : 18건 선정

- 심사위원 구성

| 성명 | 소속 및 직책 | 성명 | 소속 및 직책 |
|-----|------------------|-----|----------------------|
| 권창식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정책위원장 | 윤동구 | 前 수도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사무국장 |
| 김선아 | 인천YWCA 사무총장 | 이혜경 | 지구환경교육센터 이사장 |
| 김창균 |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장정구 |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 |
| 노형래 | 글로벌에코투어연구소 소장 | 전찬기 |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
| 송정로 | 인천in 대표이사 | 조강희 |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 |

- 평가 기준 : 아래 3가지 기준으로 10점 만점 채점, 최상위, 최하위 점수 제외

| 기준 | 내용 |
|-------|-------------------------------------|
| 구체성 | 제안 내용이 얼마나 명확하며, 인천에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가 |
| 적절성 | 인천의 환경 문제 해결에 얼마나 적합하고 효과적인가 |
| 지속가능성 | 장기적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지속될 수 있는가 |

⑤ 온라인 시민투표 : 665명 참여, 우선순위 선정

- 투표기간 : 2026년 2월 11일부터 2월 25일까지 2주간
- 투표방식 : 온라인으로 1인 당 최대 3개의 정책 투표
- 투표결과 : 665명 참여

| 분야 | 번호 | 정책명 | 득표 | 순위 |
|---------------|----|-------------------------------|-----|----|
| 기후 에너지 | 1 | 도심 방음벽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축 | 175 | 2 |
| | 2 | 우리마을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지원 | 120 | 6 |
| | 3 | 산업단지 태양광 의무화 및 지원 | 141 | 4 |
| | 4 | 인천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운영 | 62 | 16 |
| 생물다양성 녹지 | 5 | 구도심 주민참여형 포켓파크 100개 조성 | 96 | 11 |
| | 6 | 대체서식지 실효성 확보 및 책임 관리제 | 77 | 13 |
| | 7 | 인천광역시 생물다양성센터 설립 및 운영 | 103 | 10 |
| | 8 | 인천형 가로수 보호 조례 및 생태적 관리 | 110 | 9 |
| 섬 바다 갯벌 | 9 | 영종갯벌 및 준설토 투기장 습지보호구역지정 | 114 | 8 |
| | 10 | 인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 222 | 1 |
| | 11 | 어업인 참여형 인천 해양쓰레기 수거 보상제 | 122 | 5 |
| | 12 | 인천 섬 생태관광 및 '에코 도슨트' 마을 기업 육성 | 72 | 14 |
| | 13 | 인천 연안 시민에게 돌려주기 | 82 | 12 |
| | 14 | 서해 5도 해양보호구역 및 '남북 그린데탕트' | 53 | 17 |
| 녹색소비 | 15 | 인천 초록가게 네트워크 및 리필스테이션 확대 | 115 | 7 |
| 자원순환 | 16 | 노프라오션 프로젝트(NO Plastic Ocean) | 53 | 17 |
| | 17 | 군·구별 종량제 전처리(MBT) 시스템 도입 | 72 | 14 |
| | 18 | 이음포인트 기반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정책 | 161 | 3 |

2. 정책 제안

1) 기후·에너지 분야 (4개 정책)

오늘날 세계의 강대국들은 경제·자원·안보를 둘러싼 패권 경쟁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앞세우고 있으며, 전쟁조차도 국가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자원은 온통 지정학적 갈등에 쏠려 있다.

그 결과, 인류 전체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기후위기 문제는 점점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극단적 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일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도 그나마 한국은 상대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도시와 지역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지방정부는 도시 인프라, 산업 정책, 환경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의 또 다른 핵심 주체가 된다.

2026년 6월 3일은 바로 이런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그런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를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다. 이에 환경정책공모전을 열어 시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인천에 필요한 기후에너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천은 항만·공항·산업단지·대규모 교통 인프라가 공존하는 에너지 다소비 도시이면서도, 방음벽·산업단지 지붕·공공시설 등 재생에너지 확대 잠재력이 높은 도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 잠재력에 비해 에너지 전환 속도가 느리고, 시민 참여형 에너지 모델도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 이번 제안하는 정책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인 도시, 탄소중립의 모범이 되는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

1. 도심 방음벽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축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철도 노선 등 인천 도심을 관통하는 교통 인프라의 방음벽을 태양광 발전 시설로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이 정책이 실현되면 소음 차단, 에너지 생산, 교통안전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2. 우리마을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지원

타지역에 비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인천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지역 단위 협동조합 설립 행정·재정 지원, 탄소중립위원회·시민단체와 협력 거버넌스 구축, 공공부지 태양광 사업 참여 시 주민참여 협동조합에게 우선권 부여하는 방식으로 각 군·구마다 최소 1개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발전소를 운영해, 시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든다.

3. 산업단지 태양광 의무화 및 지원

도시 전력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산업단지 태양광 잠재량 조사 및 시범단지 지정, 민관산학 협력 추진단 구성,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모델 구축, 발전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목표로 한다.

4. 인천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운영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햇빛소득마을과도 관련 있는 정책이다. 재생에너지의 이익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 단위 에너지 모델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민관협력추진단을 구성하여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 주민 소득 창출, 마을 공동체 활성화라는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네 가지 정책은 서로 다른 방식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큰 방향을 공유한다.

| | |
|--------|--------------------------------------|
| 공간 활용 | 방음벽·산업단지·공공시설 등 유휴 공간을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전환 |
| 시민 참여 | 협동조합·주민 출자 등 시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는 구조 |
| 이익 공유 | 에너지 수익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모델 |
| 통합적 접근 | 기후 대응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고려 |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기후에너지분야 정책들이 반드시 수용되고 실행되기를 바란다.

2) 생물다양성·녹지 분야 (4개 정책)

지구는 생물다양성 위기다.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상의 생물종(Species)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Ecosystem)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한다. 생물다양성은 인류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갈수 있는 근간이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이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발생 저감만이 아니라 자연환경을 잘 보전함으로써 탄소 발생을 상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각종 개발과 환경오염, 기후위기 등으로 생물다양성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1992년 국제 조약인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논의, 이행해 왔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으로 이행 수단의 부족과 사회 전 분야의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으로 분석해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4년간의 논의를 거쳐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라는 명칭의 전략계획을 채택했다.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사회·경제 전 분야의 변혁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2050년까지의 목표(Goals, 4개), 2030년까지의 실천목표(Targets, 23개), 이행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 등 도전적인 실천목표를 채택했다.

한국정부는 국제 사회가 작성한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평가도 진행 중이다. 인천은 아직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생태환경공간과 개발, 정비사업이 대치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에는 내륙 녹지축인 한남정맥과 2개의 국가하천, 30개의 지방하천, 120여개의 소하천이 있고,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언급되는 갯벌과 168개의 섬, 크고 작은 공원들이 있으며, 이 곳을 터전으로 수많은 동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인천시민들이 생계의 터전으로, 휴식터로 삼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반면 여러 개발, 정비 사업과 시설 도입 등으로 자연생태공간이 잠식 당하거나 심지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럼에도 희망인 것은 관심갖고 행동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수십년간 인천시민들은 각종 개발 사업을 막는 과정에서, 생태적 가치를 알리는 과정에서 양서류, 조류, 곤충류, 저서생물 등을 기록하고 알리고 보전 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시민 활동의 성과 중 하나가 저어새생태학습관 건립과 인천시의 깃대종 선정이다. 하지만 특히 깃대종의 경우, 홍보, 교육활동에 그치고 실제 인천시의 종 보호, 서식지 보전 정책과는 연계되지 않은 한계점, 비판점이 존재한다.

AI 시대에 많은 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지만, 우리 인류 삶의 근간이 되는 생물다양성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또한 자연 속에서 다양한 생명이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감수성과 공감능력이 발현될 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길 바라고,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도시 인천을 바라며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안한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들어 부쩍 도시 환경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가까이에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공원이 늘어나길 바라고, 무심코 지나쳤던 가로수가 한 생명으로 존중받길 바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개발사업 부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을 다른 곳에 강제 이주 시키는 대체서식지가 개발사업의 면죄부가 되고 있어 대체서식지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묻고,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정책 제안도 있었다. 통합적인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인 보존, 조사, 시민참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전문 인력이 배치된 생물다양성센터 설립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시민들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에 귀기울여 민선9시는 적극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5. 구도심 주민참여형 포켓파크 100개 조성

인천 구도심인 부평구, 미추홀구, 계양구, 동구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3~6㎡에 불과해 WHO 권장 기준인 9㎡에 크게 못 미치고, 신도시와의 격차도 커 녹지환경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조례 제정과 시범사업을 통해 1~5평 규모의 생활 밀착형 작은 공원 100개를 조성하고, 주민이 직접 디자인과 관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동네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녹지를 늘리자는 제안이다.

6. 대체서식지 실효성 확보 및 책임 관리제

개발사업 과정에서 조성되는 대체서식지가 실제로는 개발 허가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생태적 고려 없이 자투리땅으로 생물을 옮기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안이다. 이에 대체서식지는 최소 10년 이상 책임 관리하고, 이주한 생물이 3세대 이상 안정적으로 번식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만 성과를 인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주 생물의 상태를 공개하는 '생태 이력제'를 도입하고, 대체서식지를 영구 보전구역으로 지정해 향후 재개발을 막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7. 인천광역시 생물다양성센터 설립 및 운영

인천의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사, 보전, 시민참여

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제안이다. 생물다양성 센터를 설립해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깃대종과 보호종의 서식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주기적으로 갱신해 인천의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다. 또한 시민과학 활동을 지원해 지역 생태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실제 시정과 정책에 반영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8. 인천형 가로수 보호 조례 및 생태적 관리

전선 접촉 사고 예방이나 민원 해결을 이유로 반복되는 무분별한 강전정은 가로수의 생태적 기능과 경관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수관의 25%를 초과하는 전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조례를 마련하며, 나무를 과도하게 자르지 않는 과학적 전정 방식과 절연 전선 교체를 표준화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초록 파수꾼'을 운영해 가로수 전정 상태를 상시 기록하고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

3) 섬·바다·갯벌 분야 (6개 정책)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직접 인천에 필요한 환경정책을 제안하고, 그중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고르는 과정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몇 가지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시민들이 인천의 현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지를 드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양 분야에서 선정된 정책들은 인천이라는 도시의 성격과 미래 방향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준다.

인천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를 넘어, 갯벌과 섬, 철새와 해양생물, 어업과 연안 마을이 함께 살아가는 해양도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갯벌 매립과 연안 개발, 해양쓰레기, 접경 해역의 긴장, 섬 지역의 어려움처럼 바다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동시에 쌓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선정된 해양 정책들은 단순히 바다를 보호하자는 주장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인천의 바다를 앞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지, 개발과 이용 중심의 접근을 넘어 생태적 가치와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둘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은 바다를 더 많이 활용할 대상이 아니라, 더 잘 지키고 함께 누려야 할 공동의 자산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정책 선정 과정에서 '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이 1위로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시민들이 인천의 미래를 개발과 자본의 논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갯벌과 바다의 가치를 바탕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천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시민들은 먼저 갯벌과 바다를 떠올린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정책 선정 결과는 인천이 앞으로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9. 영종갯벌 및 준설토 투기장 습지보호구역지정

이 정책의 배경에는 계속되는 연안개발과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갯벌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 특히 영종갯벌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큰뒷부리도요, 알락꼬리마도요 등 멸종위기 조류의 이동 경로상의 주요 서식지이자 번식지이며, 2024년 조사를 통해 관찰된 물새가 60종, 최대 2만 3,026개체에 이르러 람사르 습지 기준인 2만 개체를 충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만조 시 물새들의 휴식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단지 새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인천 연안의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며, 인천이 해양도시로서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 분명히 선언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이 정책은 해양정책의 출발점을 '개발'이 아니라 '보전'에 두자는 시민들의 요구라고 볼 수 있다.

10. 인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2021년 한국의 갯벌이 1단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IUCN의 반려 권고를 뒤집기 위해 인천시와 경기도는 인천 갯벌을 포함한 2단계 확대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인천과 경기의 불참으로 그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26년 7월 부산에서 열릴 세계유산위원회 심사는 큰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인천이 빠진 채 심사가 진행될 경우, 자문기구인 IUCN이 인천 등 핵심 서식지의 누락을 문제 삼아 다시 반려를 권고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 정치적 결단의 부재가 있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등재 신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국제사회와 약속했던 확대 추진이 사실상 파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지금 인천은 단순히 "등재를 해 볼까 말까"를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지킬 것인가, 인천 갯벌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제안하고 지지한 이 정책의 의미는 인천이 세계 앞에서 "우리 도시는 이 자연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일이다. 이것은 환경 정책인 동시에 도시의 신뢰와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이것은 인천의 발전 방향을 바꾸는 정책으로 시민들이 인천의 미래 발전을 개발 중심에서 생태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은 세계유산 브랜드를 활용한 고품격 생태 관광의 활성화, 지역 농수산물의 가치 제고, 인천형 갯벌 상생 모델과 수익 공유 방식을 함께 만들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마디로 잘 지키는 것이 곧 더 좋은 발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11. 어업인 참여형 인천 해양쓰레기 수거 보상제

인천 앞바다는 한강 하구를 통해 들어오는 쓰레기, 어업 과정에서 생기는 폐어구, 바다를 떠다니는 각종 쓰레기로 심하게 오염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20년 2,991톤에서 2021년 7,378톤, 2022년 7,788톤으로 크게 늘었다. 이것은 해양쓰레기 문제가 이미 눈앞의 현실이라는 뜻이다.

이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어업인을 단순히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해결의 주체로 본다는 데 있다. 조업 중에 쓰레기를 수거하면 보상하고, 집하장과 신고 체계를 만들고, 교육과 인증도 함께 하자는 내용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직접 바다를 지키게 하자는 뜻이다. 해양쓰레기 문제를 푸는 일은 환경을 지키는 일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생계와 미래를 지키는 일이며 인천처럼 섬과 연안이 넓은 곳에서는 특히 더 필요한 정책이다.

12. 인천 섬 생태관광 및 '에코 도슨트' 마을 기업 육성

인천 섬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배값 할인 같은 제도가 있어도 섬 안에서 머물며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생태 콘텐츠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단순히 "섬에 많이 오게 하자"가 아니라, 섬의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이다.

이 정책은 청년 에코 도슨트를 키워 섬의 지질, 철새, 해양생물 등을 해설하게 하고, 지역 주민은 숙박·식사·체험 같은 영역에서 함께 참여하게 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또 배값 할인 대신 섬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주자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관광객이 섬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바다를 지키는 일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함께 지키는 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매우 따뜻하고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13. 인천 연안 시민에게 돌려주기

이 정책은 "인천의 바다는 과연 시민의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인천은 해양도시이지만, 실제로는 방조제, 군사지역, 공장, 각종 시설 때문에 시민이 쉽게 바다에 다가갈 수 없는 곳이 많다. 그래서 이 정책은 우선 개방 가능한 해안을 조사하고, 시민들이 배우고 쉬고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며, 인공적으로 바뀐 해안선을 자연형으로 복원하자고 제안한다.

이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시민이 바다를 직접 만나야 바다를 아끼고 지키려는 마음도 커지기 때문이다. 시민이 바다를 걷고 보고 배우게 되면, 해양 보전은 훨씬 더 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산책길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다시 시민의 공공 공간으로 돌려주고, 해양도시 인천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제안이다.

14. 서해 5도 해양보호구역 및 '남북 그린데탕트'

이 정책은 백령·대청·연평 등 서해 5도를 단지 접경지역이나 군사적으로 긴장된 공간으로만 보지 않고, 매우 중요한 생태 공간이자 평화의 가능성을 품은 바다로 바라보자는 제안이다. 서해 5도가 점박이물범, 저어새 같은 멸종위기종의 핵심 서식지이지만, 남북 관계의 경색과 군사적 긴장 때문에 체계적인 조사와 보호가 어려웠으며 백령·대청·소청도 일대의 세계지질공원 추진도 정치적 이유로 중단된 상태이다.

이 정책의 의미는 환경을 통해 평화의 길을 열어보자는 데 있다. 먼저 남측 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인천이 보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괭이·물범 보호,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같은 비정치적 협력을 북측에 제안하자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정치와 군사 문제로 막혀 있는 남북 관계 속에서 생태와 환경을 매개로 대화의

물꼬를 터보자는 것이다. 서해 5도의 자연을 지키는 일은 곧 주민의 삶과도 연결되며 보호구역 지정은 생태계 보전뿐 아니라 수산자원 회복, 지역 생태관광의 활성화, 국제적 가치 인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서해 5도를 긴장의 바다에서 생명의 바다, 평화의 바다로 바꾸자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4) 녹색소비·자원순환 분야 (4개 정책)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와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면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개선, 자원순환 확대 등 사회 전반의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천시는 국가 목표보다 5년 앞선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다양한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수도권 대표적 항만·산업도시이자 수도권 폐기물 처리의 중심 역할을 해온 지역으로, 폐기물 문제와 자원순환 정책이 도시 환경정책의 핵심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 도시 개발과 소비 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의 매립 중심 폐기물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자원순환 중심 도시로의 전환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 정책뿐 아니라 시민의 녹색소비와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가오는 [2026년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지방정부의 환경정책과 기후 대응 전략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의제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인천의 탄소중립 2045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원순환 정책 강화와 시민 참여 기반의 녹색소비 확산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선거 정책 의제로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민사회는 인천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시민 투표를 통해 우선 추진이 필요한 정책을 선정하는 시민 참여 정책 발굴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인천시민은 자원순환·녹색소비 분야에서 총 네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15. 인천 초록가게 네트워크 및 리필스테이션 확대

지역 상점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리필스테이션을 확대함으로써 생활 속 녹색소비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6. 노프라오션 프로젝트(NO Plastic Ocean)

해양도시 인천의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항만·도시 통합 관리 정책으로, 항만과 연안,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7. 군·구별 종량제 전처리(MBT) 시스템 도입

군·구별 종량제 폐기물 전처리(MBT)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선별하고 소각과 매립 중심의 폐기물 처리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8. 이음포인트 기반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정책

시민들의 분리배출과 재사용, 자원순환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천형 포인트 시스템을 활용하는 시민 참여형 정책이다.

이 가운데 자원순환·녹색소비 분야에서 「이음포인트 기반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정책」이 시민 투표를 통해 우수 제안 정책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폐기물 관리와 자원순환 정책이 행정 중심의 시설과 제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 속 실천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시민들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투명페트병과 캔 회수, 다회용기 이용, 장바구니 사용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자원순환 행동에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지역 상점이나 녹색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참여형 인센티브 시스템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분리배출 참여와 재사용 실천이 확대되어 재활용률을 높이고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포인트 사용을 녹색매장이나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과 연계할 경우 녹색소비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창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시민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환경 실천의 주체로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민 참여와 보상 시스템을 결합한 이러한 정책은 생활 속 환경 행동을 확산시키고, 인천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맺음말

시민이 선택한 인천의 환경정책

인천환경정책ON은 시민이 직접 인천의 환경문제를 제안하고, 그 해결 방향을 함께 선택하는 과정이었다. 이번 제안서는 그 과정에서 모인 시민의 문제의식과 바람, 그리고 인천의 미래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다. 여기 담긴 정책들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인천의 현실과 생활 속 경험에서 출발해 시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들이다. 바다와 갯벌, 생물다양성과 녹지, 자원순환과 녹색소비, 기후에너지 전환에 이르기까지, 시민은 인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목소리를 보여주었다.

정당과 후보자에게 바란다

이제 공은 정당과 후보자에게 넘어갔다. 시민이 제안하고 선택한 정책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하는 것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의 기본 책무일 것이다. 어떤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이 필요하다. 환경정책은 더 이상 선언적 문구나 부수적 의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다. 정당과 후보자들이 이번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인천의 미래를 위한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정책 제안에서 이행 점검까지

인천환경정책ON은 이번 제안서 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민의 제안이 선거 시기의 수사로 소모되지 않고 실제 공약과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일까지 이어져야 한다. 시민참여는 제안하는 순간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지켜지는지 함께 확인할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인천환경정책ON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정책 반영 여부를 살피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제안과 점검을 이어가며 인천의 환경정책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도록 힘쓰고자 한다.

맺음말

인천의 변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인천환경정책ON은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선택한 환경정책을 통해 지방선거를 보다 실질적인 정책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번 제안서가 정당과 후보자, 시민과 지역사회를 잇는 공론의 기반이 되고, 인천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시민과 함께 만든 이 제안이 인천의 내일을 바꾸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II. 세부 정책

| | | | | | | |
|------------|---|------|--------------------------------------|---|----------------|--|
| 번호 | 1 | 정책제목 | 인천시 도심 고속도로·철도 방음벽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축 | | | |
| 정책분야 | 기후 에너지 | 제안대상 | 인천시장 후보 / 정당 | | | |
| 예산범위 | 2억 ~ 5억 | 실행기간 | 1년 ~ 4년. 민선 9기 임기 내 실현 가능 | | | |
| 문제 1출정의 | 인천시 도심 고속도로와 철도 방음벽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결합해 소음 저감과 동시에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가로등·열선도로 등에 활용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인천형 환경·안전 정책을 제안한다. | | | | | |
| 배경 및 문제점 | <p>인천은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도심을 관통하는 고속도로와 철도 노선이 많아 주거지역 인접 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p> <p>이에 따라 방음벽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방음벽은 유지관리 비용만 발생하는 '소극적 민원 대응 시설'에 머물러 있다.</p> <p>한편,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에너지 비용 증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라는 과제가 동시에 존재한다.</p> <p>이제 방음벽을 단순 차단 시설이 아닌, 에너지 생산과 교통안전을 동시에 해결하는 도시 인프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p> | | | | | |
| 정책내용 | <p>1. 터널형 방음벽 상부 태양광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 구간 중 주거 밀집 지역을 터널형 방음벽으로 조성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 -교통안전성, 재난대응성 등을 평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구간이나 지점 우선 검토 <p>2. 벽면형·경사형 방음벽 태양광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방음벽을 태양광 일체형(BIPV) 구조로 전환 - 남향·경사 구조를 활용해 발전 효율을 높임 - 인천지하철2호선 지상구간 인접 주거지역에 적용 - 교통안전성, 재난대응성 등을 평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구간이나 지점 우선 검토 <p>3. 생산 에너지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및 보행로 가로등, 보안등 전력 공급 -겨울철 결빙 구간에 열선 도로 적용 -교차로 및 교통안전 시설 보조 전력 활용 <p>4. 적용가능지역 : 경인고속도로 & 제2경인고속도로 도심통과구간, 인천지하철2호선 지상구간/국철 주거인접 소음민원지역 등</p> <p>5. 민민, 민관, 관관 협력사업으로의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 다양한 관리 및 소유 관계가 존재함에 따라 민민, 민관, 관관 협력사업으로의 추진이 타당 - 인천시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되 시설 관리운영 주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로 성과 도출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를 위한 역할 분담과 관리운영 방식의 결정) <p><정책수단></p> <p>한국도로공사, 코레일, 도시철도공사 등과의 협약, 설치예정지의 주민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추진, 1차 시범사업구간을 선정하고 예산의 매칭 및 실행. 추후 성과측정을 하고 조례제정(예: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조례)도 추진</p> | | | | | |
| 정책수단 | 조례 제(개)정 | ○ | 시범사업 추진 | ○ | 조사, 연구 | |
| | 인(디)센티브(보조금,요금) | | 인프라 설치, 개선 | | 교육, 인식증진, 정보제공 | |
| | 협약, 거버넌스 | ○ | 기타 수단 | | | |
| 정책목표 1출 정의 | 도심 고속도로·철도 방음벽을 태양에너지 생산 시설로 전환하여, 교통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확대하며, 교통안전 강화 및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방음벽 상부나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생산 전력을 도로·보행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 | | |
| 성과지표 | 태양광 발전량, 온실가스 감축량, 도로조면 에너지 자급률, 겨울철 결빙사고건수, 소음저감 효과, 경제성 효과 등 | | | | | |

| | |
|--------------------------------------|---|
| <p>정책 실행의 장점</p> | <p>이 정책이 실행되면, 지금까지 단순히 소음을 차단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던 도심 고속도로와 철도 방음벽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교통 안전을 지키는 적극적인 도시 인프라로 전환된다. 방음벽 상부나 벽면에 설치된 태양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가로등, 보안등, 교통 안전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어 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p> <p>특히 겨울철 결빙 구간에 열선 도로를 적용할 경우,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안전 정책으로 체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p> <p>또한 도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와 철도 인접 지역의 소음 문제를 완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긍정적인 기능을 더함으로써 방음벽 설치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인천이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이미지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p> |
| <p>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p> | <p>이 정책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재정적 요소와 함께 주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방음벽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구간 선정과 에너지 활용 방식에 대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수용성과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p> <p>또한 지역사회 단체, 에너지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마련해 유지관리와 운영에 공동으로 책임을 나누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발전량과 성과를 주민과 공유하고,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면 방음벽 태양에너지 시스템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관리하고 지속시키는 공공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p> |
| <p>참고자료 / 근거</p> | <p>국내에 영등포 자원순환센터 방음벽, 남해선 폐도로 태양광 이 있고, 이탈리아 고속도로에 태양광방음벽 설치사례 있음.</p> |

| | | | | | | |
|----------------|--|------|---------------------------------|---------------------------|----------------|--|
| 번호 | 2 | 정책제목 | 우리마을 재생에너지협동조합 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 | | | |
| 정책분야 | 기후 에너지 | | 제안대상 | 인천시장 후보 / 정당 | | |
| 예산범위 | 미정 | | 실행기간 | 1년 ~ 4년. 민선 9기 임기 내 실현 가능 | | |
| 문제 1줄정의 | 인천은 시민 중심의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 | | | |
| 배경 및 문제점 | 현재 인천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숫자도 적고 그나마 있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도 보유하고 운영하는 재생에너지발전소가 턱없이 부족하다. 인천은 공무원 사회가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소극적이다. 뿐만아니라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들도 소극적이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더더욱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디게 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협동조합을 통한 시민 주도의 재생에너지확대를 지자체가 적극 추진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정책내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자체가 지역 탄소중립을 실천을 위해 "우리마을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 2.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 때 지역의 탄소중립위원회 또는 지속가능협의회 그리고 시민 활동가와 단체 등과 협업하도록 거버넌스를 만든다. 3. 초기 발전소를 하나 이상 건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 4. 유휴부지 또는 공공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경우, 인천시민들 3분의 2이상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사업의 우선권을 가지도록 의무화 한다. 5. 이런 사항을 포함한 가칭 "우리마을재생에너지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 | | | | |
| 정책수단 | 조례 제(개)정 | ○ | 시범사업 추진 | ○ | 조사, 연구 | |
| | 인(디)센티브(보조금,요금) | | 인프라 설치, 개선 | | 교육, 인식증진, 정보제공 | |
| | 협약, 거버넌스 | ○ | 기타 수단 | | | |
| 정책목표 1줄 정의 | 각 군구에 최소한 1개의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이 1개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 운영 관리하기 | | | | | |
| 성과지표 | 실제 군구별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의 숫자와 재생에너지발전소 보유 숫자 체크하기 | | | | | |
| 정책 실행의 장점 | 시민들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실행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민주주의적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다. | | | | | |
|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의 적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을 시민 중심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기에 실제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 발전소를 짓는 것도 운영 및 관리하는 것도 모두 시민들의 출자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 없이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다. 2. 제일 중요한 것은 유휴부지를 확보해서 재생에너지협동조합에 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 | | | | |
| 참고자료 / 근거 | 경기도 사례 https://www.gggongik.or.kr/m/page/archive/archiveinfo_detail.html?board_idx=5071 | | | | | |

| | | | | | | |
|----------------|--|------|---------------------------|-------------------------|----------------|--|
| 번호 | 3 | 정책제목 | 산업단지 태양광 의무화에 따른 정책지원 | | | |
| 정책분야 | 기후 에너지 | 제안대상 | 인천시장 후보 / 정당 | | | |
| 예산범위 | 5억 이상 | 실행기간 | 1년 ~ 4년. 민선 9기 임기 내 실현 가능 | | | |
| 문제 1출정의 |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로 온실가스 감축 | | | | | |
| 배경 및 문제점 | 인천 내의 산업단지가 에너지사용량이 많음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를 통해 탄소중립과 RE100 달성 산업단지 노동자 및 지역주민이 함께 협동조합을 통해 이익공유 모델 마련 | | | | | |
| 정책내용 | 민관산학 협력으로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시민추진단 구성 인천시 소재 산업단지 태양광 잠재량 측정 및 조사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시범사업단지 지정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를 위한 용역 : 예산과 운영방안 마련 시민참여형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산업단지 태양광 이익 공유화와 사회공헌 | | | | | |
| 정책수단 | 조례 제(개)정 | ○ | 시범사업 추진 | ○ | 조사, 연구 | |
| | 인(디)센티브(보조금,요금) | ○ | 인프라 설치, 개선 | | 교육, 인식증진, 정보제공 | |
| | 협약, 거버넌스 | ○ | 기타 수단 | 인천시 도시공사, 인천 산업단지공단과 협력 | | |
| 정책목표 1출 정의 |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를 통한 에너지전환과 이익공유화 | | | | | |
| 성과지표 |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 | | | | |
| 정책 실행의 장점 | 재생에너지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시민인식 전환 태양광 수익을 통해 지역사회 환원과 이익공유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로 인한 직접적인 전기 사용량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효과 | | | | | |
|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비용 마련, 태양광 수익을 통한 사회공헌과 이익공유 | | | | | |
| 참고자료 / 근거 | 산업단지태양광 활성화 보고서(녹색연합) https://issuu.com/i_greenkorea/docs/_20231031?fr=xKAE9_zU1NQ 산단태양광 활성화(산업자원부 보도자료) https://www.k-re100.or.kr/bbs/board.php?bo_table=sub2_1_2&wr_id=46&page=2 산단태양광 활성화법률(서왕진의원실) https://www.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2656 | | | | | |

| | | | | | | |
|----------------------|--|------|---------------------------|---|----------------|---|
| 번호 | 4 | 정책제목 | 인천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 | | |
| 정책분야 | 기후 에너지 | 제안대상 | 인천시장 후보 / 정당 | | | |
| 예산범위 | 5억 이상 | 실행기간 | 1년 ~ 4년. 민선 9기 임기 내 실현 가능 | | | |
| 문제 1줄정의 |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햇빛발전을 통한 이익공유 | | | | | |
| 배경 및 문제점 | 기후위기시대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한 지역에너지전환은 필수 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민간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햇빛소득이 태양광이 설치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재생에너지에 참여하면서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 | | | | |
| 정책내용 | 민관협력으로 인천시햇빛소득마을 추진단 구성 햇빛소득마을 추진대상지 탐색및 선정 마을단위 햇빛소득 마을 추진단 구성 햇빛소득마을 추진에 따른 주민참여자 모집 및 편당 | | | | | |
| 정책수단 | 조례 제(개)정 | | 시범사업 추진 | ○ | 조사, 연구 | ○ |
| | 인(디)센티브(보조금,요금) | ○ | 인프라 설치, 개선 | | 교육, 인식증진, 정보제공 | |
| | 협약, 거버넌스 | ○ | 기타 수단 | | | |
| 정책목표 1줄 정의 |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통한 이익공유 | | | | | |
| 성과지표 | 햇빛소득 추진마을 개소수, 햇빛소득 추진단 참여자 주민수 햇빛추진단을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 | | | | |
| 정책 실행의 장점 | 재생에너지 설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햇빛소득을 통한 이익공유, 마을 공동체 활성화 | | | | | |
|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시민참여거버넌스 필요 군구 단위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구성을 통한 민관협의체 구성 | | | | | |
| 참고자료 / 근거 | 경기도 여주 구양리 모델.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확대추진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id=122461 경기도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공모사업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ldx=110036838&bsldx=469&bcldx=0&menuId=1547&isManager=false&isCharge=false&keyfield=SUBJECTANDREMARK&keyword=%ED%83%9C%EC%96%91%EA%B4%91&page=1 | | | | | |

| | | | | |
|----------|---|------|---|--|
| 번호 | 5 | 정책제목 | 구도심에 숨 쉬는 초록 : 인천 주민참여형 포켓파크 100개 조성 프로젝트 | |
| 정책분야 | 생물다양성, 녹지 | 제안대상 | 인천시장 후보 / 정당 | |
| 예산범위 | 5억 이상 | 실행기간 | 1년 ~ 4년. 민선 9기 임기 내 실현 가능 | |
| 문제 1출정의 | 인천 구도심(부평구, 미추홀구, 계양구, 동구)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3~6㎡로 WHO 권장 기준(9㎡)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신도심(연수구 17.68㎡)과의 격차는 6배에 달해 녹지환경 불평등이 심각하고 시민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47.8%)를 기록하고 있음 | | | |
| 배경 및 문제점 | <p>2023년 기준 인천시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11.67㎡로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 경기 다음으로 좁으며, 특히 구도심과 신도심 간 격차가 매우 큼 지표누리 e나라지표 : 전국 도시숲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08&utm_source=chatgpt.com 경인일보 구도심 살면 녹지 '1평'... 인천 1인당 생활권 도시숲 양극화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2294</p> <p>[인천 구도심 - 신도심 녹지 격차 현황] 구도심 녹지 현황 (2023년 기준) : - 부평구: 3.09㎡ (전국 최하위 수준) - 미추홀구: 4.34㎡ - 계양구: 4.85㎡ - 동구: 6.52㎡</p> <p>신도심 녹지 현황 (2023년 기준) : - 연수구: 17.68㎡ - 남동구: 13.86㎡ - 서구: 13.25㎡ 구도심 주민들은 신도심 대비 1/3~1/6 수준의 녹지만 이용 가능</p> <p>[1] 대형 공원 조성의 한계 - 구도심은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대형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움 - 토지 매입 비용이 상당하고 재정 부담 가중의 가능성이 큼</p> <p>[2] 시민 만족도 최하위 - 통계청 '국민 삶의 질 보고서 2024'에 따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녹지 환경에 만족하는 인구 비율이 인천은 47.8%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p> <p>[3] 환경 및 건강 영향 - 녹지 부족으로 열섬현상 심화 및 미세먼지 저감 기능 부족</p> | | | |
| 정책내용 | <p>대형 공원 조성이 어려운 구도심의 현실을 고려해 주민참여형 포켓파크 방식으로 주민 생활권 5분 이내에 촘촘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 약 1~5평 내외의 작은 규모로 자투리 부지 및 장기간 방치된 유휴 부지 등 작고 불규칙한 공공 또는 사유지에 조성</p> <p><유휴 공간 발굴 및 활용> [1] 공공 유휴지 - 도로 자투리 부지, 고가도로 하부, 전선 하부, 사용하지 않는 공공 부지 [2] 민간 유휴지 - 장기간 방치된 유휴 부지, 불법 경작 및 폐기물 투기로 훼손된 부지에 대한 소규모 공공 매입 [3] 재개발, 재건축 연계 -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 외부 주민도 이용 가능한 개방형 포켓파크 조성 의무화</p> <p><주민참여형 조성 및 관리 방식> [1] 행정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직접 조성 및 관리까지 담당. ex)주민자치위원회 [2] 지역 주민 공모를 통한 포켓파크 후보지 선정 [3] 주민 참여 워크숍을 통한 디자인 결정 + 전문가(조경관련) 협업 설계 [4] 포켓파크 지킴이 제도로 지속적 운영 및 관리 : 활동비 지원 및 교육 [5] 포켓파크 조성 주민에게 '인천 녹색시민' 인증서 발급 : 우수 주민에게 시상 [6] 자원봉사포털 연계 봉사시간 인정</p> <p><정책수단> [1] 조례 제(개)정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형 포켓파크 조성 및 관리 조례 [2] 시범사업 추진 : 1개구 25개소 시범 조성(구도심 4개구 중 1개구 우선 시작) [3] 조사, 연구 : 조성 전후 주민 만족도, 미세먼지 저감,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4] 인(디)센티브 (보조금, 요금) : 주민참여 활동비 지원, 활동 우수팀 시상, 자원봉사시간 연계</p> | | | |

| | | | | | | |
|----------------------|--|---|------------|------------|----------------|---|
| | <p>[5] 인프라 설치, 개선 : 포켓파크 4개구 총 100개소 조성 [6] 교육, 인식증진, 정보제공 : 주민참여 워크숍, 조성 및 관리 교육, 우수사례 홍보 [7] 협약, 거버넌스 : 시,군,구 - 주민자치회 - 환경단체 협력 [8] 민간 협력 - 민간 자원봉사단체 협력 조성 - 지역 대학 조경, 환경 관련 학과와 산학협력 - 기업 연계 : 기업이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기업 이름을 붙이는 포켓파크 조성 - 매칭 펀딩 : 사업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펀딩 형태로 모금 [9] 토지 확보 : 유휴 부지 조사 및 소규모 부지 우선 매입</p> | | | | | |
| 정책수단 | 조례 제(개)정 | 0 | 시범사업 추진 | 0 | 조사, 연구 | 0 |
| | 인(디)센티브(보조금,요금) | 0 | 인프라 설치, 개선 | 0 | 교육, 인식증진, 정보제공 | 0 |
| | 협약, 거버넌스 | 0 | 기타 수단 | 민간협력, 토지확보 | | |
| 정책목표 1출 정의 | 인천 구도심 4개 구(부평, 미추홀, 계양, 동구)에 주민이 도보 5분 내 접근 가능한 포켓파크 100개소를 조성을 통한 구도심 1일단 생활권 도시숲 면적 확대와 녹지환경 만족도 평균 이상 상승 | | | | | |
| 성과지표 | <p>[1] 포켓파크 조성 개수 : 4개구 총 100개소 설치 [2]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증가 [3] 녹지 공간 주민 접근성 개선 : 생활권 5분 내 접근 가능 주민 비율 증가 [4] 미세먼지 저감 효과 : 포켓파크 주변 반경 미세먼지 농도 측정 [5] 생물다양성 증가 : 포켓파크 내 생물군 모니터링 [6] 녹지 환경 만족도 확인 : 시민 만족도 [7] 주민참여율 : 포켓파크 조성 관리에 참여한 주민 수</p> | | | | | |
| 정책 실행의 장점 | <p><환경적 측면> [1] 녹지 형평성 실현 : 신도심과 구도심의 녹지 격차 해소 [2] 도시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3] 생물다양성 증진 : 포켓파크가 도심 내 생태 거점으로서의 역할 <사회적 측면> [1] 주민 건강 증진 [2] 노인 휴식 및 어린이 놀이 공간 확보 [3] 도시재생 효과 : 장기간 방치된 유휴 부지를 주민 중심 생활공간으로 변화시킨 모범 사례 <경제적 측면> [1] 예산 효율성 : 대형 공간 대비 낮은 비용으로 조성 [2] 주민 참여로 관리비용 절감 [3] 지역경제 활성화 : 조경,화훼 지역 업체 우선 고용 <정책적 측면> [1] 선도적 모델 창출 : 전국 최초 대규모 주민참여형 포켓파크 조성 [2] 시민참여 거버넌스 강화 : 주민참여형 모델, 시민 주도의 환경 개선 문화 확산</p> | | | | | |
|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p>[1] 안정적 예산 확보 - 시 예산 중 공원 녹지 예산의 일부를 포켓파크에 배정 - 국비 지원 : 도시숲 조성사업 - 민간 협력 : 기업 참여 및 매칭 펀딩 - 주민참여로 관리비 절감 - 기존 완충녹지와 유휴 부지 활용으로 토지 매입 비용 최소화 - 지역 조경업체와 협력으로 단가 인하 [2] 주민 참여 방식 유지 - 지속적 동기 부여 : 우수 관리팀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 봉사시간 연계 및 녹색시민 인증서 발급 - 지역 대학과 산학협력 - 초,중,고 생태 프로그램 연계 [3] 전문 관리 체계 - 인천광역시 포켓파크 지원센터 설립 : 전담인력 배치 -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대학 및 환경단체와 분기별 현장 점검 모니터링 - 디지털 관리 시스템 : 포켓파크 통합관리 플랫폼(실시간 신고 및 개선) [4] 다른 정책과의 연계 -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 워커히 연계 - 인천시 탄소중립 계획 반영 - 여름철 쿨링포그, 그늘막 설치 연계</p> | | | | | |
| 참고자료 / 근거 | <p>1. 서울시 삼지공원 2. 영국 세인트 로드 앤 포켓파크 3. 언론기사 - 경인일보 구도심 살면 녹지 '1평'... 인천 1인당 생활권 도시숲 양극화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2294 - 경기일보 주민 1사당 3.3㎡ 미만... 인천 구도심 "실 공원 없어요"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829580318 - 한국일보 도시숲조차 부유한 지역에 몰려... 공원 하나 찾을 수 없는 서민 동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0716200001190 - 헤럴드경제 경기도와 민간단체, 빈집을 공원으로 변신시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009133 4. 부천 YMCA 새로운 유형의 녹색 도시공간, 포켓 파크(Pocket Park) 기고 http://www.bcyymca.or.kr/FieldSave/120271</p> | | | | | |

| | | | | | | |
|------------|--|------|---|---------------|----------------|---|
| 번호 | 6 | 정책제목 | 생명을 위한 '진짜' 보금자리 : 대체서식지 조성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 관리제 도입 | | | |
| 정책분야 | 생물다양성, 녹지 | | 제안대상 | 인천시장 후보 / 정당 | | |
| 예산범위 | 5억 이상 | | 실행기간 | 4년 이상. 장기간 추진 | | |
| 문제 1출정의 | 개발 허가를 위한 '면죄부'로 전략한 대체서식지의 형식적 운용을 중단해야함. 생태적 고려 없이 자투리 땅에 생물을 몰아넣는 '강제 이주' 방식은 결국 생물다양성의 파괴로 이어질 것. | | | | | |
| 배경 및 문제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 멸종위기종은 수만 년간 특정 환경에 적응해 온 존재이므로 미세 환경(먹이그물, 습도 등)에 대한 복원 없이 물리적 장소만 옮기는 것은 사실상 '느린 사형 선고'와 다름없음. - 행정의 관리 사각지대: 환경영향평가 협의만 끝나면 사후 관리 의무가 희미해짐. 보고서에 따르면 위치 선정 및 개체 수용력 분석이 부실한 상태로 조성되어 방치되는 사례가 허다하고있음. - 사후 관리 공백: 이주 시킨 개체가 실제로 번식하고 정착했는지에 대한 질적 평가보다 "이주를 완료했다"는 행정적 결과물에만 치중되고 있음. 또한 이주 완료 보고서 제출 이후 생존·번식 여부를 장기적으로 확인·관리할 전문 주체와 재원이 부재함. | | | | | |
| 정책내용 | <p>1. 환경영향평가 '생태적 부적합' 승인 거부권 및 조건부 동의 강화 내용: 대체서식지 계획이 단순 물리적 이전(강제 이주)에 그치고 미세 환경(습도, 먹이망 등) 복원 계획이 미비할 경우, 시 차원에서 협의를 반려하거나 '재설계'를 강제하는 강력한 심사 기준 적용. 효과: 개발 면죄부용으로 작성되는 부실한 계획서를 설계 단계에서 원천 차단.</p> <p>2. 대체서식지 책임 관리제(최소10년, 번식 및 정착 확인까지) 및 강력 페널티 내용: 단순 3~5년 사후관리에서 확대, 안정적 번식(3세대 이상) 및 정착이 확인될 때까지 관리 책임 지속, 실패 시 '원상 복구' 및 페널티: 조성된 서식지가 기능을 상실할 경우, 사업자에게 재조성 명령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생태 복원 비용을 엄격히 부과. 효과: 사업자의 중도 포기나 부도 등 관리 공백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p> <p>3. '생태 이력제(Bio-Tracking)' 시스템 구축 및 실시간 정보 공개 내용: 이주한 멸종위기종의 개체별 상태, 번식 여부, 서식지 환경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관리하고, 이를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공 생태 데이터 포털' 운영. 효과: 행정의 불투명성을 제거하고 시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압박 수단.</p> <p>4. '생태적 적응 기간(Acclimatization Period)' 공정 의무화 내용: 공사 현장에서 바로 대체서식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중간 기착지에서 최소 1회 이상의 번식기를 거치며 적응력을 높이는 '소프트 릴리즈(Soft-release)' 공정을 모든 개발 사업의 필수 공정으로 삽입. 효과: 이주 직후 발생하는 급격한 폐사율을 낮추는 기술적 강제 장치.</p> <p>5. 대체서식지 '영구 보전지' 지정 및 토지 용도 변경 금지 내용: 조성된 대체서식지를 도시계획상 '영구 보전 구역'이나 '공공 공원'으로 묶어, 향후 또 다른 개발이나 용도 변경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토지 대장에 명시. 효과: 서식지가 시간이 흐른 뒤 다시 개발되는 '지속적 추방'의 굴레를 차단.</p> <p>6. '서식지 적합성 평가' 독립 검증 의무화: 개발 부지 내 남는 땅이 아니라, 해당 종이 실제 생존 가능한지 전문가가 입증한 장소에만 대체서식지 조성 허가. (입지 선정 엄격화)</p> <p>7. 이주 공정의 투명성 확보: 모든 이주 과정에 시민단체와 전문가 참관을 의무화하고, 사전 모니터링부터 이주 후 정착까지의 전 과정을 '생태 이력제'로 관리하여 공개.</p> | | | | | |
| 정책수단 | 조례 제(개)정 | ○ | 시범사업 추진 | ○ | 조사, 연구 | ○ |
| | 인(디)센티브(보조금,요금) | | 인프라 설치, 개선 | ○ | 교육, 인식증진, 정보제공 | ○ |
| | 협약, 거버넌스 | ○ | 기타 수단 | | | |
| 정책목표 1출 정의 | 대체서식지를 개발의 면죄부가 아닌 생명의 온전한 보금자리로 전환하여,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는 실질적인 '생태 정의'를 인천에서 실현. | | | | | |
| 성과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 지표: 대체서식지 내 목표 종의 실제 번식 확인율 및 생물다양성 지수(먹이-은신-연결성) 회복도, 실패 사업의 복원 집행률 - 행정적 지표: 대체서식지 사후 관리 보고서의 공공 데이터 공개 건수. | | | | | |

| | |
|--------------------------------------|---|
| <p>정책 실행의 장점</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신뢰 회복: '무늬만 서식지'가 아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태 복원 체계 구축. - 유사 사업과의 차별화 : 유사사업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책임관리·페널티·투명성 등 구조 개선에 집중. - 생명 존중의 도시 브랜드: 개발의 이익만큼이나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인천의 이미지 제고. |
| <p>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p> | <p>(1)조례를 통한 법적 구속력: 권고 사항에 그치지 않도록 인천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대체서식지의 세부 관리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p> <p>(2)통합관리 전담조직 설치 : 원서식지와 대체서식지를 통합으로 관리하는 전문인력, 상시 현장점검, 데이터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위탁하여 연례 평가를 정례화해야 합니다.</p> <p>(3)시민 거버넌스 감시 체계: 전문가·시민·행정 합동점검을 상설화하여 서식지를 관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행정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p> |
| <p>참고자료 / 근거</p> | |

| | | | | | | |
|-----------------|---|------|---|---------------------------|----------------|---|
| 번호 | 7 | 정책제목 |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관리 : 인천시 생물다양성센터 설립 및 운영 | | | |
| 정책분야 | 생물다양성, 녹지 | | 제안대상 | 인천시장 후보 / 정당 | | |
| 예산범위 | 5억 이상 | | 실행기간 | 1년 ~ 4년. 민선 9기 임기 내 실현 가능 | | |
| 문제 1출정의 | 인천광역시의 통합적인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보존, 조사, 시민참여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전문 인력이 배치된 생물다양성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필요성 제기 | | | | | |
| 배경 및 문제점 | <p>* 2017년(2017.11.28.)에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의무화되었고, 법 제34조의 2에 따라 광역시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5년마다 갱신하여 작성해야 함.</p> <p>* 인천광역시는 2010년에 시작해서 2014년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완료하였고, 이후 2021년 6월 용역에 다시 착수하여 2년 6개월의 과업기간을 거쳐 2023년 연말에 갱신한 상태임.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 내륙과 유인도서 및 일부 무인도서를 포함하여 중요 생태자원의 보전 및 우수비오톱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과 각종 도시개발, 도시계획 수립 등 도시지역에 대한 생태적 기능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p> <p>* 인천광역시는 2006년 7월에 보호 야생 동식물 (24종)을 지정 및 고시하였으나 그 이후 20년 동안에 각 해당 생물종들에 대한 인천 내 서식 및 분포 현황, 주요서식지 변화, 분류체계 수정사항 반영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p> <p>* 또한, 인천광역시는 2021년 제51회 지구의 날을 맞이해 인천을 대표하는 생태가치자원의 발굴과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로서 인천을 상징하는 깃대종으로 '저어새(조류), 금개구리(양서류), 점박이물범(포유류), 흰발농게(무척추동물), 대청부채(식물)' 총 5종을 지정 및 선포하였으나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p> <p>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도시생태현황조사, 보호야생동식물, 깃대종, 보호지역 관리 등을 포함하여 현재 인천광역시 전체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관리에 대한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조사·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에 대한 여러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자체의 일부 부서들에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비정기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p> | | | | | |
| 정책내용 | 우선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인천광역시 생물다양성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그 이후 인천광역시 생물다양성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중심으로 인천시의 깃대종을 포함한 보호야생동식물 조사 및 재검토, 보호지역 관리, 주요 생태중점지역 조사,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외래종 및 생태계교란종 대응관리, 생물다양성 교육 및 시민과학 활동 등 다양한 생물다양성 조사, 관리에 대한 업무들이 통합적으로 관리 및 수행될 수 있도록 기본체계가 마련되길 바램. | | | | | |
| 정책수단 | 조례 제(개)정 | ○ | 시범사업 추진 | | 조사, 연구 | ○ |
| | 인(디)센티브(보조금,요금) | | 인프라 설치, 개선 | ○ | 교육, 인식증진, 정보제공 | ○ |
| | 협약, 거버넌스 | | 기타 수단 | | | |
| 정책목표 1출 정의 | 인천광역시 생물다양성센터 설립 및 운영 | | | | | |
| 성과지표 | 센터 설립 및 운영 이후에 수행되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실질적인 각종 조사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 시민들의 관련활동 참여 결과에 대한 성과공유 발표, 시정 전반에 관련된 생태환경에 대한 기초자료 및 홍보자료 제공. | | | | | |
| 정책 실행의 장점 | 인천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주변 생태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기본적인 생물종과 생태환경 정보를 시 차원에서 제공하고 계속해서 DB정보를 축적 및 공유 해가면서 시민들과 함께 더욱 살기좋은 도시로서의 기본 토대를 만들어 갈 수 있음. 또한 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태자원과 우수비오톱지역 등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발굴 및 파악하여 주거, 관광, 도시계획 등 다양한 시정 전반에 적용하여 각종 정책 수립과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 | | | |

| | |
|--------------------------------------|--|
| <p>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p> | <p>해당 정책은 별도의 중앙 정부 협력과 허가사항 없이, 지자체 자체에서 전적으로 결정하여 추진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됨. 또한 설립 전후로 민간단체 등에 의한 위탁 운영의 형태가 아니라 지자체 직속으로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는 광역 단위의 책임성을 가지는 센터로서의 성격이 요구됨.</p> <p>인천광역시 생물다양성센터의 본격적인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처음부터 센터의 규모와 업무과제를 크게 완전히 결정하여 추진하지 않고, 우선은 기본적인 생태조사 및 연구활동, 관리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규모로 작게 시작하여 점차 그 규모와 활동업무를 부처간 협력과 필요에 맞추어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p> <p>또한, 인천광역시 생물다양성탐사 행사 운영, 시민과학 활동, 조사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지속적인 유도하여 계속 함께 이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음.</p> |
| <p>참고자료 / 근거</p> | <p>[다른지역 사례] 울산광역시 생물다양성센터 https://www.ulsanbdc.or.kr/</p> <p>인천광역시 자연환경 현황 https://www.incheon.go.kr/env/ENV040101</p> <p>인천광역시 보도자료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8876277</p> |

| | | | | |
|----------|---|------|-------------------------------------|--|
| 번호 | 8 | 정책제목 | 인천형 가로수 보호 조례 제정 및 생태적 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 | |
| 정책분야 | 생물다양성, 녹지 | 제안대상 | 인천시장 후보 / 정당 | |
| 예산범위 | 2억 ~ 5억 | 실행기간 | 1년 ~ 4년. 민선 9기 임기 내 실현 가능 | |
| 문제 1출정의 | 전선 접촉 사고 예방·민원 해결이라는 명목하에 반복되는 무분별한 강전정(일명 '닭발전정')은 도심 생물 다양성의 징검다리인 가로수의 생태적 기능(그늘·탄소흡수·도심생물다양성)을 마비시키고 도시경과과 안전관리의 수준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임 | | | |
| 배경 및 문제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적 개선의 한계: 2023년 인천시의 개선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용 절감과 편의를 위해 나무의 수형을 완전히 파괴하는 '닭발 가로수'가 반복되고 있음. 또한 전정 기준이 '현장 재량'으로 남아 있어, 같은 구·같은 도로에서도 결과가 다름. - 생태·기후 적응 가치의 상실: 가로수는 탄소 흡수원이자 도심 생태망의 핵심 임프라이나, 잎·수관을 크게 잃으면 그늘(열섬 완화)·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소음 완충 기능이 급감함. - 잘못된 문제 해결 방식: 접촉위험 및 전선이나 간판 가림 문제는 나무를 베지 않고도 '절연 전선 교체'나 '과학적 전정(통로 확보형)', '이격 확보'으로 해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손쉬운 나무 희생 방식인 '절단'을 택하고 있음. - 경관·미학 관점의 부재: 가로수길은 '그늘'뿐 아니라 도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수형·열주감(연속성)·가로 공간의 비례가 깨지면 시민 체감 만족도가 급락할 수 밖에 없음. 전정은 안전 작업이면서 동시에 조경·디자인 행위라는 인식 전환 필요. | | | |
| 정책내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법] '인천형 가로수 보호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 잎(수관) 과다 제거 금지(ex. 수관 손실 25% 초과 전정 원칙적 금지) 및 국제표준 ANSI A300 준수)하고, 이를 어기는 공사에 대해 엄격한 페널티를 부과. -발주·시공·감독 책임 명문화 : 감사·분쟁 대비하여 설계서, 전정기록, 현장사진, 사후 평가 의무화. -가로수는 도시의 생태 자산임을 조례 목적 조항에 명시(정책 철학 고정) [기술] '나무를 자르지 않는 안전대책' 표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로 확보형 과학적 전정 의무화 - 전선 구간만 비워주는 방식(ex. V-자형/측면 이격 중심)으로 표준 시방서 마련 - 수목 전용 절연 전선 교체 사업을 병행하여 안전과 생명을 동시에 확보. - 민원 다발 구간·사고 위험 구간을 우선 선정(데이터 기반) - 전정 전 '사전 진단' 의무 : 수종, 생육상태, 계절, 병해충 여부에 따른 작업 제한(무리한 시기 전정 차단) [인력, 전문성] 가로수 관리 '전문 기관 특화' 및 인증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가로수 생태관리 센터를 설치하여 표준·교육·감리·데이터 총과를 전담하게 함. (조경·수목진단·도시생태 인력도 포함) - 전문업체 인증제 : 교육이수(표준 전정·생태·안전·민원 커뮤니케이션) 및 현장 평가 통과 시만 입찰체 참여, 작업자 실명제 및 현장 책임기술자 지정 -현장 감리 강화 : 체크리스트를 통해 주기적인 점검(전정 전과 중, 후) 및 무작위 현장 점검 시행. [경관, 미학] 인천 가로수길 디자인 가이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길은 그늘, 열주감, 계절감이 핵심이라는 목표를 설정 (1) 수형 목표(성목 수관 형태), 가지 올림 높이, 간격 및 연속성, 보행자 시야 확보 기준 (2) 상권 간판, 차도 시야문제는 '전정'이 아니라 '디자인 이격 기준'과 병행(간판 높이·돌출 기준 등과 조정) - 시범사업 운영 : '인천 가로수길 10선'을 선정하여 전정·보식·가로 환경(벤치, 투수포장 등) 까지 묶어 품격 있는 거리 모델을 시민이 체감하게 만들. 시민 공감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사례 벤치마킹(국내·외) : 국내 지자체의 전정 기준·발주 시스템, 해외 도시의 urban forestry 체계 조사 후 인천형으로 번역 - 시민 설문조사(인식·민원·유형·우선과제)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에 반영 - 공개 토론회 : 주민(상인, 보행자), 전문가(조경, 수목, 전기안전), 행정, 한전·통신 관계자 등 협업 구조 공식화 - 가로수 코디네이터('초록 파수꾼') 운영 : 시민이 사진·위치 기반으로 전정 상태 기록, 예산 지원(교육, 소정 활동비)으로 상시 감시·협력 체계 구축 | | | |

| | | | | | | |
|----------------------|--|---|------------|---|----------------|---|
| | <p>6. 신규 도시개발 단계 예방 : 수종 선정·식재 설계 의무화 - 개발, 재개발, 택지 조성 인허가 단계에 '가로수 민원 예방형 체크리스트' 포함 (1) 수종 선정 매트릭스(알레르기, 열매·악취, 병해충 취약성, 뿌리 용기, 그늘 성능 등) (2) 식재 간격·토양 용적·빛물침투(투수) 설계 기준 (3) 전선 계획(지중화, 이격, 절연)과 가로수 계획을 동시에 심의 - 결과적으로 '심고 자르는 도시'가 아닌 '처음부터 맞게 심는 도시'로 전환</p> <p>7. 민원 대안 패키지 - 은행나무 민원 해법 고도화 : 민원 해결을 '나무 죽이기'가 아닌 '관리 체계 개선'으로 전환 (1)단기 : 열매 수거 장비(진동 수확기 등) 도입 및 청소·수거 프로토콜 표준화 (2)중장기 : 점진적 압나무 교체 로드맵(구간, 연도별) 수립</p> | | | | | |
| 정책수단 | 조례 제(개)정 | ○ | 시범사업 추진 | ○ | 조사, 연구 | ○ |
| | 인(디)센티브(보조금,요금) | | 인프라 설치, 개선 | | 교육, 인식증진, 정보제공 | ○ |
| | 협약, 거버넌스 | | 기타 수단 | | | |
| 정책목표 1출 정의 | 가로수를 단순한 도로 시설물이 아닌 인천의 그늘·탄소흡수·생물다양성을 책임지는 '도시 생태 자산'으로 전환해, 안전·경관·시민 만족이 함께 올라가는 가로수길 표준을 정착시킬 수 있음. | | | | | |
| 성과지표 | 1. 강전정(닭발전정) 제로화 : 전수조사로 '수관 과다 제거(ex. 25%초과) 의심 개체 비율'을 매년 측정 → 0% 목표 2. 가로수 기능 회복(기후·건강 지표) : 잎면적지수(LAI) 또는 수관피폭률 등으로 수관 회복 추적, 그늘 체감 지표(보행로 표면온도, 열쾌적 설문 등)병행 가능 3. 경관, 미학 지표 : 표준 가로수길 구간에서 '열주감(연속성)·수형 만족도' 시민평가 점수화 4. 시민 공감대 지표 : 설문 응답자 수, 토론회 참여자 수, 초록 파수꾼 활동 등록/활동 건수, 민원 양상 변화(긍정 피드백 비율) 5. 전문성, 품질 지표 : 인증업체 참여 비율, 교육 이수자 수, 현장 위반 적발률, 재발률 감소 | | | | | |
| 정책 실행의 장점 | - 안전을 이유로 생태를 포기하지 않고, 기술·설계·전문성으로 '둘 다' 잡는다. - 닭발전정 논란을 줄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그늘, 걷기 좋은 거리로 도시 품격을 높인다. - 신규 도시개발 단계부터 민원을 예방해 장기 관리비용과 갈등을 줄인다. | | | | | |
|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1)조례를 통한 법적 구속력 명문화: 단순한 지침(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강전정 금지'와 '위반 시 제재'를 명시하여 행정의 법을 따르도록 해야 함 (2)'전선 지중화'와의 중장기적 연계: 나무를 자르는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전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도심의 전선 지중화 사업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연계해야 함. (3)민원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 "간판 가린다", "낙엽 치우기 싫다"는 민원에 굴복하는 행정의 아니라, "가로수의 공익적 가치"를 설명하고 자르지 않는 편이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가로수 소통 전담 창구'가 운영. (4)시민 거버넌스의 활성화: 시민들이 직접 나무의 상태를 기록하고 지키는 '가로수 코디네이터'나 '초록 파수꾼' 활동에 예산을 지원하여, 행정이 감시받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야 함. (5)전문기관 특화: 담당 부서의 인사 이동/예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게, 표준·교육·감리·데이터의 컨트롤 타워 시스템을 기관화 함. | | | | | |
| 참고자료 / 근거 | | | | | | |

| | | | | | | | |
|------------|---|------|------------------------|---------------------------|----------------|--|---|
| 번호 | 9 | 정책제목 | 영종갯벌 및 준설토투기장 습지보호구역지정 | | | | |
| 정책분야 | 섬, 바다, 갯벌 | | 제안대상 | 인천시장 후보 / 정당 | | | |
| 예산범위 | 2천만원 ~5천만원 | | 실행기간 | 1년 ~ 4년. 민선 9기 임기 내 실현 가능 | | | |
| 문제 1줄정의 | 영종갯벌은 멸종위기조류의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음. 물새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습지보호구역지정 필요. | | | | | | |
| 배경 및 문제점 | 각종 연안개발 및 준설토투기장 등으로 갯벌 매립이 지속되며 갯벌면적이 줄어들고 있음. 특히 영종갯벌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큰뒷부리도요, 알락꼬리마도요 등 멸종위기조류 이동경로로 중요. 2024년 인천녹색연합 영종조류모니터링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종갯벌 주변에서 관찰된 물새류는 60종으로 최대 관찰 수는 23,026개체에 이룸. 이는 람사르습지보호지역 기준 20,000개체를 충족하는 개체수임. 특히나 준설토투기장은 만조시 물새들의 휴식처의 기능을 하는 것을 확인함. 전세계적인 멸종위기 조류들의 서식지임이 확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 관리 필요. | | | | | | |
| 정책내용 |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 지역현장의 이해를 돕는 교육 및 축제 등을 진행 제안. 주요 지점들에 대한 보호지역지정 및 관리. | | | | | | |
| 정책수단 | 조례 제(개)정 | | 시범사업 추진 | | 조사, 연구 | | 0 |
| | 인(디)센티브(보조금,요금) | | 인프라 설치, 개선 | | 교육, 인식증진, 정보제공 | | |
| | 협약, 거버넌스 | | 기타 수단 | | | | |
| 정책목표 1줄 정의 |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매립 제한 및 생물다양성 증대 | | | | | | |
| 성과지표 | 습지보호구역 지정 | | | | | | |

| | | | | | | |
|----------------|---|------|-------------------------------|---------------------------|----------------|---|
| 번호 | 10 | 정책제목 | 인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및 대응 체계 구축 | | | |
| 정책분야 | 섬, 바다, 갯벌 | | 제안대상 | 인천시장 후보 / 정당 | | |
| 예산범위 | 5억 이상 | | 실행기간 | 1년 ~ 4년. 민선 9기 임기 내 실현 가능 | | |
| 문제 1줄정의 | 1단계 등재 시 약속한 '인천 갯벌 확대' 미이행에 따른 국제적 신뢰 위기 및 2026년 2단계 심사에서의 반려 권고 가능성 직면 | | | | | |
| 배경 및 문제점 | 국제적 약속의 미이행: 2021년 1단계 등재 시 IUCN의 반려 권고를 뒤집기 위해 인천시와 경기도가 약속했던 '2단계 확대'가 현재 인천과 경기의 불참으로 인해 이행되지 않고 있음. 2단계 심사의 불확실성: 2026년 7월 부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인천이 빠진 채 심사가 진행될 경우, 자문기구(IUCN)가 '인천 등 핵심 서식지 노력'을 이유로 반려를 권고할 위험이 큼. 정치적 결단 부재: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인천시가 등재 신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 파기될 위기에 처해 있음. | | | | | |
| 정책내용 | [시나리오 A] 2단계 전격 합류 대응: 2026년 상반기 IUCN 검토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인천시가 즉각 '등재 참여'를 선언하고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비상 대응 체계(Task Force) 가동. [시나리오 B] 3단계 확대 추진 확약: 2단계 심사에서 유네스코가 추가 확대를 권고할 경우, 강화·영종·송도 갯벌을 포함한 3단계 등재를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즉시 전환. 민관 협력 거버넌스 공식화: '인천갯벌2026' 등 시민사회와 행정의 정례적으로 소통하는 '인천 갯벌 세계유산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인천형 갯벌 상생 모델' 개발: 어업권 보호 및 생태 관광 수익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등재를 '규제'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도록 인센티브 정책 병행. 인천갯벌 세계유산센터 설치 : 인천 제2준설토 투기장을 생태복원해 갯벌의 기능을 되살리고 인천갯벌 세계유산센터를 설치해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개발. | | | | | |
| 정책수단 | 조례 제(개)정 | | 시범사업 추진 | ○ | 조사, 연구 | ○ |
| | 인(디)센티브(보조금,요금) | ○ | 인프라 설치, 개선 | ○ | 교육, 인식증진, 정보제공 | |
| | 협약, 거버넌스 | ○ | 기타 수단 | | | |
| 정책목표 1줄 정의 | 2026년 세계유산위원회 심사 결과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인천 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 전체의 유산 지위를 공고히 하고 등재를 성공시킴. | | | | | |
| 성과지표 | 인천 갯벌 등재를 위한 '참여 확약서' 또는 '신청 보완서' 제출 여부 세계유산 등재 주민 찬성 비율 및 지역 거버넌스 회의 개최 횟수 해양보호구역(등재 전제조건) 추가 지정 면적 | | | | | |
| 정책 실행의 장점 | 국제적 신뢰 회복: 1단계 때의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인천시의 외교적 신뢰도를 회복함. 유산 지위 방어: 2단계 심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위 박탈' 또는 '반려' 위기를 인천의 참여로 돌파함. 경제적 파급효과: 세계유산 브랜드를 활용한 고품격 생태 관광 활성화 및 지역 농수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 | | | | |
|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정치적 일관성: 시장 및 구청장의 교체와 관계없이 등재 추진이 이어지도록 '인천 갯벌 보전 조례'에 등재 추진 명문화. 주민 갈등 관리: 규제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상설 설명회와 실질적인 보상 대책(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마련. | | | | | |
| 참고자료 / 근거 | 2021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한국의 갯벌 확대 권고) 2025년 '인천갯벌2026' 민간 등재 신청서 및 활동 보고서 인천시 갯벌 보전 및 이용 방안 수립 용역 자료 | | | | | |

| | | | | |
|-----------------|---|-------------|-----------------------------------|--|
| 번호 | 11 | 정책제목 | 인천 바다지킴이' 어업인 참여형 인천 해양쓰레기 수거 보상제 | |
| 정책분야 | 섬, 바다, 갯벌 | 제안대상 | 인천시장 후보 / 정당 | |
| 예산범위 | 5억 이상 | 실행기간 | 1년 ~ 4년. 민선 9기 임기 내 실현 가능 | |
| 문제 1줄정의 | 인천 앞바다는 한강 하구 쓰레기로 인한 쓰레기 유입과 어업활동 폐어구, 해외 유입 쓰레기로 심각하게 오염이 진행돼 해양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음 | | | |
| 배경 및 문제점 | <p>[1] 한강 하구 쓰레기의 지속적 유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 임진강, 예성강 등 주요 강줄기를 통해 대량의 쓰레기가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어 황해가 오염되고 있음 - 전국 해양쓰레기 13만1,931톤 중 한강 하구에서만 7,500톤(6%)이 수거 - 인천 앞바다의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20년 2,991톤에서 2021년 7,378톤, 2022년 7,788톤으로 급증 <p>[2] 어업활동으로 인한 폐어구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민들이 사용하는 1회용 꽃게잡이 그물 등의 어구가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되면서 서식지를 파괴하고 해양생물들을 죽음으로 내몰리게 함 -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5만톤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톤, 이중 3.8만톤(76%)이 폐어구로 추정 - 유령어업으로 인해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약 4천억원)의 경제적 피해 발생 - 인천 연평도 꽃게잡이 어민들의 일회용 그물 회수율은 70%에 불과하며, 연간 500톤 이상의 폐그물이 발생 <p>[3] 무인도와 접근 어려운 해안의 관리 사각지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녹색연합 조사 결과, 무인도인 구지도에서 2,005개, 불음도 남서쪽 해변에서 4,280개의 해양쓰레기 발견 - 반면 해양쓰레기 수거 거점이 있는 연평도 구리동 해변 153개, 불음도 조갯골 해수욕장 239개로 최대 28배 차이 - 관리가 잘 되는 해수욕장 대비 무인도와 인적이 드문 해변에서 약 4~390배의 해양쓰레기 발견 | | | |
| 정책내용 | <p>인천의 어업인들이 조업 중 발견하는 해양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와 편리한 인프라를 제공</p> <p>[1] 조업 중 해양쓰레기 수거 보상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시행중인 어구보증금제가 아닌 어구보증금제로 해양쓰레기 수거 보상 제도 개선 -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한 해양쓰레기(폐어구, 페스티로폼, 플라스틱 등)를 무게별로 수매 - 참여 어선에 대한 연료비 지원 <p>[2] 권역별 해양쓰레기 집하장 네트워크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도, 북도, 연평도, 백령/대청도, 덕적도, 자월도, 영흥도, 중구,서구에 해양쓰레기 현장 집하장 설치 - 각 집하장에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제공 및 현장 관리인 배치 - 섬 지역의 경우 정화운반선을 활용한 정기 수거 체계 구축 <p>[3] 어업인 해양환경 교육 및 인증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어업인 대상 해양환경 보전 교육 실시 - 교육 이수 및 적극 참여 어업인에게 '인천 바다지킴이' 인증서 발급 - 인증 어업인에게 어업 관련 행정 혜택 제공(면허 갱신 우대, 보조금 심사 가산점 등) <p>[4] 실시간 해양쓰레기 신고 앱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이 조업 중 대형 폐어구나 쓰레기 집적지를 발견하면 GPS 좌표와 함께 신고 - 신고 건에 대해 포인트 적립, 일정 포인트 달성 시 보상금 지급 -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양쓰레기 핫스팟 지도 작성 및 집중 관리 <p><정책수단></p> <p>1.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 인천광역시 해양폐기물 관리 및 어업인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p> | | | |

| | | | | | | |
|----------------------|--|---|------------|---|----------------|---|
| | 2. 시범사업 추진 - 연평도(외부 유입, 어업)와 강화도(한강 하구 유입) 권역에서 일정 기간 시범사업 실시 3. 인(디)센티브 (보조금, 요금) - 수거 보상금 및 연료비 지원 4. 인프라 설치, 개선 - 권역별(인천 섬포털 기준) 집하장 설치 5. 교육, 인식증진, 정보제공 - 어업인 교육 프로그램 및 모바일 해양쓰레기 신고 앱 개발 6. 협약, 거버넌스 - 지자체, 수협, 어촌계, 인천 지역 환경단체와 협약 체결 | | | | | |
| 정책수단 | 조례 제(개)정 | ○ | 시범사업 추진 | ○ | 조사, 연구 | |
| | 인(디)센티브(보조금,요금) | ○ | 인프라 설치, 개선 | ○ | 교육, 인식증진, 정보제공 | ○ |
| | 협약, 거버넌스 | ○ | 기타 수단 | | | |
| 정책목표 1줄 정의 | 인천 해역 어업인 50% 이상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참여 및 연간 해양쓰레기 수거량 이전 대비 50% 이상 증가를 통한 해양생태계 회복 | | | | | |
| 성과지표 | 1.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참여 어업인 수 증가량 2. 연간 해양쓰레기 수거량 3. 폐어구 한정 수거량 4. 해양쓰레기 수거 집하장 설치량 | | | | | |
| 정책 실행의 장점 | [환경적 측면] 1. 해양생태계 회복 : 폐어구를 비롯한 해양쓰레기 감소로 유령 어업 방지 및 해양생물 피해 감소 [경제적 측면] 1. 어업 생산성 향상 : 깨끗한 인천 앞바다 어장 조성으로 어획량 증대 2. 어업인 소득 증대 : 수거 보상금으로 연간 추가 소득 창출 [사회적 측면] 1. 어업인 인식 변화 : 해양 환경 보호의 주체로서의 인식 제고 2. 지역사회 연대 강화 : 어업인, 인천 시민, 행정의 협력 모델 구축 [정책적 측면] 1. 우수 사례 창출 : 전국 연안 지역으로 확대 가능 2. 데이터 기반 관리 : 해양쓰레기 관리 시스템 구축 | | | | | |
|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1. 안정적 자원 확보 - 인천시 예산 편성 : 연간 5억원 이상 -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비 지원 - 민간 기업 ESG 활동 연계 - 해양쓰레기 재활용을 통한 수익 일부 사업비로 환원 2. 어업인 참여 지속 유도 - 보상금 체계 강화를 통한 실질적 인센티브 유지 - 인천 바다지킴이 인증제를 통한 명예와 실익 제공 3. 효율적 운영 체계 -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데이터 관리 - 수협, 어촌계와 협력으로 행정력 확보 및 분산 - 대한, 연구기관과 협력 :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 4. 제도적 뒷받침 - 인천광역시 해양폐기물 관리 및 어업인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5. 타 정책과의 연계 - 인천시 탄소중립 2045 - 인천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 - 어구보증금제,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 | | | | | |
| 참고자료 / 근거 | 1. 어구보증금제 2. 반려해변활동 3. 해양쓰레기 수거보상제도 : 해치움 캠페인 4.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관리 대책 : 27년부터 '바닷속 폐어구 발생≤수거'목표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 6. 해양환경정보포털 : 해양폐기물 바로알기 7. 노르웨이 Fishing for Litter 프로그램 : 어업인 해양쓰레기 수거 프로젝트 | | | | | |

| | | | | | | |
|----------------|--|------|--|----------|----------------|---|
| 번호 | 12 | 정책제목 | 인천 섬 생태관광 활성화 및 세대 통합형 '에코 도슨트' 마을 기업 육성 | | | |
| 정책분야 | 섬, 바다, 갯벌 | 제안대상 | 인천시장 후보 / 정당 | | | |
| 예산범위 | 5억 이상 | 실행기간 | 1년 ~ 4년. 민선 9기 임기 내 실현 가능 | | | |
| 문제 1줄정의 | 여객선 운임 지원 중심의 일시적 관광 정책으로 인한 섬 지역 체류 시간 및 소비 부족, 전문 콘텐츠 부재에 따른 섬 생태 가치 저평가 | | | | | |
| 배경 및 문제점 | <p>지방 소멸과 청년 부재: 인천 섬 지역은 초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나, 청년들이 섬에 정주하며 일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일자리가 부족함.</p> <p>관광 콘텐츠의 한계: '바다패스' 등으로 접근성은 좋아졌으나, 정작 섬에 도착했을 때 즐길 만한 고유의 생태 콘텐츠가 부족하여 단순 방문(당일치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p> <p>과도한 규제: 어민들이 생태 관광 가이드로 활동하며 선상 체험을 제공하려 해도, 낚시 어선 등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선박 안전 검사 절차와 규제가 진입 장벽이 됨.</p> <p>경제적 선순환 부족: 배값 할인 혜택이 섬 내부의 실질적인 소비(숙박, 식당, 체험)로 연결되지 않고 여객선사에만 집중되는 구조임.</p> | | | | | |
| 정책내용 | <p>인천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생태관광지 지정, 예산 지원 및 관광 수익의 지역 사회 환원 구조를 명문화하여 사업의 지속성 확보.</p> <p>세대별 특화 역할 분리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장노년층): '로컬 마스터'로서 생태관광 인프라(어선 체험, 민박, 식당) 제공 및 섬의 지형·유래 등 원천 정보 전달. - 청년 에코 도슨트: '생태 전문 코디네이터'로서 과학적 생태 해설, 관광 상품 기획, SNS 마케팅 및 안전 관리 전담. <p>청년 도슨트 '베이스캠프' 조성: * 단기 알바가 되지 않도록 섬 내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공유 숙소 및 워킹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생활 인구 유입 유도.</p> <p>바다패스 '섬 이름 상품권' 전환: 배값을 직접 할인해주는 방식 대신, 할인분만큼을 섬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상품권)'로 지급하여 섬 내 실질 매출 증대 유도.</p> <p>해양보호구역 연계 '어선 생태 체험' 규제 완화: 해양보호구역 내 어민들이 생태 관광 목적으로 어선을 활용할 경우, 복잡한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특례 조례' 제정.</p> <p>섬별 '시그니처 생태 루트'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령·대청 : 지질공원 탐방 및 물범 관찰 - 연평·강화 : 저어새 및 철새 탐조 - 장봉·이작 : 갯벌 생태 체험 및 사구 탐방 등 섬마다의 고유 매력 특화. | | | | | |
| 정책수단 | 조례 제(개)정 | ○ | 시범사업 추진 | ○ | 조사, 연구 | |
| | 인(디)센티브(보조금,요금) | ○ | 인프라 설치, 개선 | ○ | 교육, 인식증진, 정보제공 | ○ |
| | 협약, 거버넌스 | ○ | 기타 수단 | 디지털 앱 구축 | | |
| 정책목표 1줄 정의 | 조례 제정과 세대 통합 일자리 모델을 통해 섬 생태계를 보존하고 주민 소득이 증대되는 지속 가능한 인천형 생태관광 실현 | | | | | |
| 성과지표 | <p>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및 관련 예산 확보 규모</p> <p>청년-지역주민 협력형 일자리 창출 수 및 마을 기업 자립도</p> <p>생태관광지 방문객 만족도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소득 증대율)</p> | | | | | |
| 정책 실행의 장점 | <p>세대 간 협력을 통해 섬 지역 고령화 문제를 생태관광의 자산으로 승화시키며, 인천만의 독특한 섬 브랜드 가치 구축.</p> <p>단순 관람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전문 도슨트를 통한 수준 높은 생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천의 생태 도시 위상 제고.</p> | | | | | |
|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p>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 배출된 도슨트들을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육성하여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생적 구조 마련.</p> <p>국제기구(EAAMP 등)와 연계한 글로벌 홍보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안정화함.</p> | | | | | |

| | | | | | | |
|---------------|---|------|-----------------|---------------------------|----------------|---|
| 번호 | 13 | 정책제목 | 인천 연안 시민에게 돌려주기 | | | |
| 정책분야 | 섬, 바다, 갯벌 | | 제안대상 | 인천시장 후보 / 정당 | | |
| 예산범위 | 2억 ~ 5억 | | 실행기간 | 1년 ~ 4년. 민선 9기 임기 내 실현 가능 | | |
| 문제 1줄정의 | 해안가 및 바다를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음. | | | | | |
| 배경 및 문제점 | 해양도시 인천이지만 방조제나 군사지역, 공장, 어촌계, 카페 등으로 접근성의 한계가 있음 해안선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이 필요함. | | | | | |
| 정책내용 | 해안가 현황조사 및 우선 개방가능 해안지역 선정. 시민들에게 교육 및 여가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또한 선형화된 해안선을 자연형 해안선으로 복원 추진.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해안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도해감. | | | | | |
| 정책수단 | 조례 제(개)정 | ○ | 시범사업 추진 | ○ | 조사, 연구 | ○ |
| | 인(디)센티브(보조금,요금) | | 인프라 설치, 개선 | ○ | 교육, 인식증진, 정보제공 | ○ |
| | 협약, 거버넌스 | ○ | 기타 수단 | | | |
| 정책목표 1줄 정의 | 사유화된 공유수면 및 단절된 해안가를 공공에게 환원. | | | | | |
| 성과지표 | 시민인식증진 척도, 해안생물 다양성 측정 등 | | | | | |

| | | | | | | |
|----------------|---|------|--|---|----------------|---|
| 번호 | 14 | 정책제목 | 화약고에서 평화의 바다로: 서해 5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기반 '남북 그린데탕트' 및 서해 생태 벨트 구축 | | | |
| 정책분야 | 섬, 바다, 갯벌 | | 제안대상 | 인천시장 후보 / 정당 | | |
| 예산범위 | 5억 이상 | | 실행기간 | 4년 이상. 장기간 추진 | | |
| 문제 1줄정의 | 서해 5도는 세계적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자 지질 유산으로서 보전 가치가 매우 높으나, 남북 관계의 가변성에 따라 보전 행정이 중앙정부의 정치적 상황에 종속되어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 | | | | | |
| 배경 및 문제점 | <p>서해 5도는 점박이물범,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의 핵심 거점이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체계적인 생태 조사가 어려움.</p> <p>그간의 남북 협력은 정부 주도만으로 진행되어 남북 관계 경직 시 대안이 부재하며, 인천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지자체 차원의 주도적 역할이 미흡함.</p> <p>백령·대청·소청도 일대의 세계적 지질 유산 가치가 국제적으로 평가받을 기회가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혀 있음.</p> | | | | | |
| 정책내용 | <p>인천시 주도의 선제적 생태 보호: 남북 관계와 별개로, 지자체 권한 내에서 백령도 점박이물범 서식지 등을 해양보호구역(MPA)으로 선제적 지정 추진 및 보호 관리 조례 강화.</p> <p>다자간 국제 협력 모델 구축: 남북 관계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UNESCO, EAAFP(인천 소재 국제기구)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체계를 설계함으로써,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우회적 생태 협력 채널 확보.</p> <p>서해 생태·지질 평화벨트 조성: 점박이물범 및 저어새의 남북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남측 백령·대청·소청도와 북측 장산곶 일대를 연결하는 '남북 공동 세계지질공원' 등재 추진을 통해 그린데탕트의 구체적 사례를 창출.</p> <p>중앙정부와의 전략적 공조: 인천시가 실질적인 해양생태 보전 과제를 주도하고, 중앙정부(환경부, 해양수산부, 통일부)에는 법적·행정적 지원과 군 협의 등 국가적 차원의 협력을 구하는 '투트랙' 전략 실행.</p> | | | | | |
| 정책수단 | 조례 제(개)정 | ○ | 시범사업 추진 | | 조사, 연구 | ○ |
| | 인(디)센티브(보조금,요금) | | 인프라 설치, 개선 | | 교육, 인식증진, 정보제공 | |
| | 협약, 거버넌스 | ○ | 기타 수단 | 인천시-국제기구(UNESCO, EAAFP)-환경부 간 다자간 거버넌스 구축 | | |
| 정책목표 1줄 정의 | 인천 주도의 선제적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서해 접경 수역을 '글로벌 생태 평화 거점'으로 전환함. | | | | | |
| 성과지표 | <p>서해 5도 내 해양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p> <p>남북 환경 협력 관련 국제 세미나 개최 및 북측 소통 재개 여부</p> <p>중단된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 절차 재개 성공 여부</p> | | | | | |
| 정책 실행의 장점 | <p>안보 리스크 감소 및 평화 브랜드 확보: '그린데탕트' 실현으로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예방하고 인천을 글로벌 평화 도시로 각인.</p> <p>국제 인증 획득: 북한의 반대를 협력으로 전환하여 중단된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획득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틀 마련.</p> <p>세계유산 시너지: 북한 갯벌로의 확대 등재 가능성을 높여 '황해 연안생태계' 전체 보호를 위한 교두보 역할 수행.</p> <p>어족 자원 보호: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중국 어선의 침범을 명분 있게 억제하고 수산 자원을 회복시켜 서해 5도 주민 소득 증대.</p> | | | | | |
|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p>다자간 협력 구조화: 남북 관계의 가변성에 대비하여 유네스코, EAAFP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모델로 설계하여 지속성 확보.</p> <p>주민 참여형 보전: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조업 규제로만 인식되지 않도록 '생태 관광' 활성화 및 소득 보전 대책 병행.</p> | | | | | |
| 참고자료 / 근거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가이드라인 및 북측의 이의제기 관련 사례 점박이물범, 철새 이동자료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사업단 보고서, 새와 생명의 터 보고서) | | | | | |

| | | | | | | |
|----------------------|--|------|---|---|----------------|---|
| 번호 | 15 | 정책제목 | 해양도시 인천의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항만·도서 통합 관리 정책 노프라오션 프로젝트(NO Plastic Ocean) | | | |
| 정책분야 | 자원순환 | 제안대상 | 인천시장 후보 / 정당 | | | |
| 예산범위 | 미정 | 실행기간 | 1년 ~ 4년. 민선 9기 임기 내 실현 가능 | | | |
| 문제 1줄정의 | 해양도시 인천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자 | | | | | |
| 배경 및 문제점 | 해양도시 인천 앞바다에는 서울/경기 등에서 강을 타고 내려오는 온갖 쓰레기가 모인다. 또한, 인천의 도서지역에서도 일회용 어구 사용으로 인해 바다에 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인천섬지역으로 운행하는 여객선을 통해서 많은 일회용품들이 섬에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관련 법과 규제가 없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과 인근 섬, 그리고 바다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천국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바다와 섬에 유입되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막아야 할 것이다. | | | | | |
| 정책내용 | <p>* 정책 아이디어</p> <p>1단계_ 인천항/여객터미널의 플라스틱 제로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플라스틱을 위한 인식개선 / 다회용기 사용시 포인트 지급 <p>2단계_ 도서지역(강화·옹진) 친환경 어업시스템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회용 컵·용기 공공 세척센터 운영 - 생분해 어구 보급 / 해변/사각지대 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p>3단계_해양쓰레기 수거 및 재자원화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해양청소선 및 방제선 투입 - 수거된 쓰레기 분리 및 재활용을 위한 일자리 창출 <p>* 실행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조례 입안 및 정책적 지원 2) 실행 부처 및 추진 위원회 설립 3) 시민과 어민 모니터단 발족 4) 해양쓰레기 정화 및 재활용 사업단 발족 | | | | | |
| 정책수단 | 조례 제(개)정 | ○ | 시범사업 추진 | ○ | 조사, 연구 | ○ |
| | 인(디)센티브(보조금,요금) | ○ | 인프라 설치, 개선 | ○ | 교육, 인식증진, 정보제공 | ○ |
| | 협약, 거버넌스 | | 기타 수단 | | | |
| 정책목표 1줄 정의 | 해양도시 인천 플라스틱 제로시대 개막 | | | | | |
| 성과지표 | <p>1단계 : 인천항/ 여객터미널 다회용기 사용량 측정 /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량 측정 / 방문객 만족도 비교 / 부여된 포인트 사전사후 비교</p> <p>2단계 : 인천 섬지역 다회용기 사용량 측정 / 생분해 어구 보급률 측정 / 해변정화 쓰레기 발생량 측정 / 어민 만족도 사전사후 비교</p> <p>3단계 : 해양청소선 및 방제선 수거 쓰레기 양 측정 / 쓰레기 재활용 일자리 관련 수치 비교</p> | | | | | |
| 정책 실행의 장점 | <p>1_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통한 탄소제로 2045 달성</p> <p>2_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의 선도도시라는 이미지 개선 효과</p> <p>3_ 깨끗한 해양 자원(수산업/관광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p> <p>4_ 깨끗한 해양도시 인천이라는 자긍심 강화</p> | | | | | |
|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조례 만들기, 시민 모니터단의 지속적 관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확보, 부처간 협력 | | | | | |
| 참고자료 / 근거 | <p>관련 보도자료 (해양 수산부_ 20230420)</p> <p>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50816&menuSeq=971&bbsSeq=10</p> | | | | | |

| | | | | |
|----------|---|------|--|--|
| 번호 | 16 | 정책제목 | 인천 초록가게 네트워크 : 일회용품 없는 가게와 리필스테이션 확대를 통한 녹색소비 실천 | |
| 정책분야 | 녹색소비 실천 | 제안대상 | 인천시장 후보 / 정당 | |
| 예산범위 | 2억 ~ 5억 | 실행기간 | 1년 ~ 4년. 민선 9기 임기 내 실현 가능 | |
| 문제 1출정의 | 일상에서 녹색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인프라(제로웨이스트 가게, 리필스테이션 등)가 부족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싶어도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임 | | | |
| 배경 및 문제점 | <p>[1] 일회용품 사용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달 문화 확산, 1인 가구 증가로 일회용품 사용량의 급증 - 인천은 수도권 대도시로 배달과 테이크아웃 소비가 활발해 일회용품 배출량이 많음 <p>[2] 녹색소비 인프라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으로 제로웨이스트 샵이 운영중이지만,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 - 인천에도 전문 샵이 존재하지만, 구별 한 두개 정도만 있는 실정이라 시민들의 접근성이 낮음 <p>[3] 시민들의 높아진 환경의식과 실천 의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Z 세대를 중심으로 그린슈머 문화의 확산 | | | |
| 정책내용 | <p>인천시 주도의 지역 내 카페, 식당, 소매점 등 소상공인과 협력해 일회용품 없는 가게(제로웨이스트 샵)을 발굴, 육성 공공 및 민간 공간에 리필스테이션을 설치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손쉽게 녹색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참여 가게를 하나의 녹색 실천 네트워크로 연결해, 시민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p> <p>[1] 인천 초록가게 인증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대상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회용품(컵, 빨대, 일회용기, 비닐봉투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가게 2. 다회용기 사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페 및 식당 3.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거나 포장 없이 벌크로 판매하는 소매점 4. 텀블러, 에코백,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는 업종 - 인증 기준 : 새싹등급 < 나무등급 < 숲등급 10개의 실천 항목 중 이행 개수로 등급 부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회용 컵 미사용 또는 다회용 컵 제공 2. 비닐봉지 미제공 또는 종이봉투/에코백 제공 3. 플라스틱 발때 미제공 또는 종이/스테인레스 빨대 제공 4. 개인 텀블러/용기 지참시 일정 금액 할인 5. 매장 내 다회용기 대여 또는 보증금 제도 운영 6. 리필스테이션 보유 7. 친환경 제품 판매 8. 매장 내 분리수거함 설치 및 운영 9. LED, 태양광 조명 사용 등 에너지 절약 실천 10. 환경보호 캠페인 참여 및 녹색소비 홍보물 게시 - 인증 혜택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천시 공식 초록가게 인증 부여(미쉐린 명패같은 형태) 2. 인증 단계별 인센티브 지원 3. 친환경 용품 구입 보조금 지급 4. 인천시 홈페이지 및 전용 앱에 초록가게 지도 등록 5. 제로웨이스트 운영 우수 가게 시상 <p>[2] 공공 및 민간 리필스테이션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 구청,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등 각 지역구별 최소 1개소 운영 - 전통시장 : 인천 주요 전통시장 시범 운영 -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 1층 : 민간 협력을 통한 리필존 설치 - 아파트 단지 : 일정 세대 이상 대단지 내 -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p>[3] 초록소비 챌린지 캠페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이 일회용품 없이 생활하는 경험을 SNS에 인증하는 챌린지 - 우수 참여자에게는 친환경 제품 세트 지급 및 초록가게 이용권 증정 <p>[4] 디지털 플랫폼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초록가게 앱 개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록가게 위치 지도 2. 리필스테이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확인 3. 녹색 소비 포인트 적립 및 사용 4. 제로웨이스트 팁 및 친환경 실천 방법 공유 커뮤니티 | | | |

| | | | | | | |
|----------------------|---|---|------------|---|----------------|---|
| | <p><정책수단></p> <p>[1] 시범사업 추진 - 리필스테이션 민간 및 공공기간 시범운영</p> <p>[2] 인(디)센티브 (보조금, 요금) - 인천시 공식 초록가게 인증제를 통해 등급별 인센티브 제공 - 친환경 제품 구매 보조금 및 다회용기 구매 보조금 - 우수 참여 가게 연말 시상 - 1년 이상 지속 운영 가게에 재인증 보너스 제공</p> <p>[3] 인프라 설치, 개선 - 리필스테이션 설치 - 참여 가게에 인증 마크, 포스터 제공 - 인천 초록가게 통합 앱 및 사이트 구축</p> <p>[4] 교육, 인식증진, 정보제공 - 참여 가게 사업주 대상 초록가게 운영 교육 - 초록 소비 챌린지 캠페인</p> <p>[5] 협약, 거버넌스 - 인천시, 자치구, 소상공인연합회, 환경단체 간 초록가게 네트워크 운영 협약 - 기업 사회공헌 파트너십 체결 - 서울시 등과 녹색소비 네트워크 협약 : 녹색소비 정보 통합 제공, 혜택 연계</p> | | | | | |
| 정책수단 | 조례 제(개)정 | | 시범사업 추진 | ○ | 조사, 연구 | |
| | 인(디)센티브(보조금,요금) | ○ | 인프라 설치, 개선 | ○ | 교육, 인식증진, 정보제공 | ○ |
| | 협약, 거버넌스 | ○ | 기타 수단 | | | |
| 정책목표 1출 정의 | 인천 전역에 초록가게 인증 제도 도입 및 리필스테이션 조성으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과 시민의 일상적인 녹색소비 실천 지원 | | | | | |
| 성과지표 | <p>[1] 인프라 구축 - 초록가게 인증 가게 개수 - 리필스테이션 설치 개수</p> <p>[2] 일회용품 감축 - 참여 가게의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량 - 리필스테이션 이용량</p> <p>[3] 시민 참여 - 앱 다운로드 수 - 초록소비 챌린지 캠페인 참여자 수</p> | | | | | |
| 정책 실행의 장점 | <p>[1] 인천 시민들의 실질적인 녹색소비 실천</p> <p>[2]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p> <p>[3]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초록가게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마케팅 - 친환경 윤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그린슈머 고객 유치</p> <p>[4] 환경교육 및 의식 개선 - 시민들의 녹색소비 실천 습관 형성</p> <p>[5] 환경 선도 도시 이미지 구축 - 전국적인 녹색소비 확산 선도</p> | | | | | |
|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p>[1] 자생력 확보 - 일정 기간 이후 참여 가게의 자발적 운영 비율 높이기</p> <p>[2] 시민 참여 유지 - 할인 혜택, 이벤트 등으로 지속적인 동기 부여 필요 - 커뮤니티 활성화 : 앱 내 사용 후기, 제로웨이스트 실천 팁 공유 등 교류 촉진</p> <p>[3] 참여 가게의 운영 지속 - 지속적이고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 정기 교육 및 컨설팅</p> <p>[4] 리필스테이션의 안정적 운영 - 품질, 위생, 재고 관리 - 무인 시스템 도입</p> | | | | | |
| 참고자료 / 근거 | | | | | | |

| | | | | | | |
|----------------|--|------|--|---|----------------|--|
| 번호 | 17 | 정책제목 | 소각과 매립을 줄이는 자원순환 전처리망 구축 : 쓰레기 제로(Zero) 인전을 위한 군·구별 종량제 전처리(MBT) 시스템 도입 | | | |
| 정책분야 | 자원순환 | 제안대상 | 인천시장 후보 / 정당 | | | |
| 예산범위 | 5억 이상 | 실행기간 | 4년 이상. 장기간 추진 | | | |
| 문제 1줄정의 |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발생지에서 감량·선별 없이 '소각'에만 의존하는 단선적 폐기물 행정과 이로 인한 지역 간 갈등 심화 | | | | | |
| 배경 및 문제점 | <p>직매립 금지 대응의 한계: 직매립 금지의 대안으로 소각 기술 선진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소각 전 단계에서 자원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함.</p> <p>주민 수용성 저하: 신규 소각장 설치에 강력한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며, 기존 소각장 활용도를 낮추지 않고 증설만 고집하는 방식은 한계에 봉착함.</p> <p>낮은 자원 회수율: 종량제 봉투 속에는 여전히 많은 양의 재활용 가능 자원이 섞여 있으나, 이를 걸러낼 전처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소각량과 매립량이 늘어나는 구조적 모순 발생.</p> | | | | | |
| 정책내용 | <p>군·구별 분산형 전처리시설(MBT) 구축: 광역 소각장에 가기 전, 각 군·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발생지에서 1차적으로 선별하는 기계적·생물학적 처리 시설 설치. 단기적으로는 소각장 증설 예정지 및 민간 위탁 비중이 높은 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우선 추진</p> <p>기계적 선별을 통한 자원 회수: 파봉기, 광학선별기, 자력선별기를 도입하여 종량제 봉투 속 플라스틱, 금속, 비닐 등을 대량 회수.</p> <p>스마트 물류 및 이송 체계: 전처리 후 남은 '최종 잔재물'은 압축 래핑(Baling & Wrapping) 공법 또는 밀폐형 암물 컨테이너를 통해 악취와 유출 없이 소각장으로 이송.</p> <p>소각로 보호 및 에너지화: 불연물(유리, 돌 등)을 사전 제거하여 소각로 수명을 연장하고, 선별된 가연성 폐기물은 고효율 연료(SRF)로 전환.</p> | | | | | |
| 정책수단 | 조례 제(개)정 | ○ | 시범사업 추진 | ○ | 조사, 연구 | |
| | 인(디)센티브(보조금,요금) | ○ | 인프라 설치, 개선 | ○ | 교육, 인식증진, 정보제공 | |
| | 협약, 거버넌스 | ○ | 기타 수단 | | | |
| 정책목표 1줄 정의 | 종량제 봉투 속 자원을 50% 이상 회수하여 소각장 신설 규모를 최소화하고 '자원순환 완결형 도시'를 구현 | | | | | |
| 성과지표 | <p>전처리 시설 도입 후 최종 소각장 반입 물량 감소율 (목표 50% 이상)</p> <p>전처리 과정을 통해 추가 회수된 재활용 자원의 연간 총량 (톤)</p> | | | | | |
| 정책 실행의 장점 | <p>사회적 갈등 해결: 무조건 소각장을 증설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선별 및 소각 최소화를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소각장 증설 비용 절감.</p> <p>환경 보호: 유해 물질을 함유한 성분을 사전 제거하여 소각 시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원천적으로 저감.</p> <p>경제성: 소각장 2개를 지을 예산으로 전처리 시설을 분산 배치하여 자원 매각 수익 창출 및 안정적인 처리망 확보.</p> | | | | | |
|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p>시설의 친환경 이미지화: MBT 시설을 지하화하거나 상부를 시민 공원화하여 혐오시설이 아닌 '자원 재생 센터'로 인식 전환.</p> <p>물류 효율성: 압축 래핑된 잔재물을 효율적으로 이송하기 위한 스마트 물류 노선 설계 및 전용 차량 확보.</p> | | | | | |
| 참고자료 / 근거 | | | | | | |

| | | | | | | |
|----------------|--|------|--|---|----------------|---|
| 번호 | 18 | 정책제목 | 이음포인트 기반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촉진 정책 완자 도시 인천(완전한 자원순환 도시) | | | |
| 정책분야 | 자원순환 | 제안대상 | 인천시장 후보 / 정당 | | | |
| 예산범위 | 5억 이상 | 실행기간 | 1년 ~ 4년. 민선 9기 임기 내 실현 가능 | | | |
| 문제 1줄정의 | 인천시민의 자원순환 실천을 100% 로 끌어올리자!! | | | | | |
| 배경 및 문제점 | <p>탄소중립 2045 목표가 19년 앞으로 다가왔으나, 시민의 일상적인 소비와 배출 방식은 충분히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분리배출, 다회용기 사용, 장바구니 활용 등 자원순환 실천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시민에게는 여전히 불편과 부담으로 인식되어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p> <p>특히 자원순환 실천이 경제적 보상이나 지역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환경 정책은 '해야 할 의무'에 머무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개별적인 환경 실천을 기록·관리하고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해 정책 효과를 누적·관리하기 어렵다.</p> <p>이에 따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의 생활방식을 실질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실천을 인센티브와 디지털 관리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p> | | | | | |
| 정책내용 | <p><정책수단></p> <p>1_ 투명페트병·캔 회수 시 이음포인트 적립(패트병수거기/ 캔수거기 설치 확대)</p> <p>2_ 다회용기 대여·반납 시 이음포인트 적립(다회용기 대여소 확대)</p> <p>3_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 시 이음포인트 적립</p> <p>4_ 이음포인트를 녹색매장, 재래시장, 제로웨이스트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p> <p>5_ 스마트폰 앱으로 참여를 기록·관리하고 많이 적립하고 많이 사용하면 이음포인트 추가 적립</p> | | | | | |
| 정책수단 | 조례 제(개)정 | | 시범사업 추진 | ○ | 조사, 연구 | |
| | 인(디)센티브(보조금,요금) | ○ | 인프라 설치, 개선 | ○ | 교육, 인식증진, 정보제공 | ○ |
| | 협약, 거버넌스 | | 기타 수단 | | | |
| 정책목표 1줄 정의 | 자원순환 실천하고 포인트받고 녹색소비하고 탄소중립하고 | | | | | |
| 성과지표 | 재활용품 회수량 사전사후비교, 시민참여율 조사, 포인트 적립 사용 비교 | | | | | |
| 정책 실행의 장점 | 시민의 참여율이 극대화되고, 탄소중립2045 달성 | | | | | |
|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예산확보방법,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민홍보 현재 이음포인트, 인천탄소중립포인트 등의 통합 및 효율화 | | | | | |
| 참고자료 / 근거 | <p>현재 '이음포인트', '탄소중립 포인트' 등이 이미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므로 통합 및 정리 필요함</p> <p>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줄이면 포인트 준다... 2026년 '감량 인센티브' 첫 도입 https://www.mediayouth.kr/news/903841</p> <p>군포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와 포인트 보상 https://segyelocalnews.com/article/1065572107576085</p> <p>해외 DRS(용기보증금 반환제) - 이미 독일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용기보증금 반환제가 자원순환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음</p> | | | | | |

2026년 인천을 바꾸는 시민환경정책공모

인천환경정책ON 정책제안서

폐년날 2026년 3월 31일

발행처 인천환경정책ON 추진위원회

폐년이 인천환경정책ON 기획단